

노회찬의원 4주기
정책토론회

제6공화국을 넘어,
새로운 공화국으로

노회찬재단
국회의원 심상정

제6공화국을 넘어 새로운 공화국으로

일시: 2022년 7월 13일(수) 오후 2시

장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 노회찬재단,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

순서

13:50-14:00 등록

14:00-14:10 인사말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

14:10-14:25 기조연설 조돈문 노회찬재단 이사장

주제발표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새로운 공화국을 향한 진보정치의 비전과 전략”
14:25-15:00

주제발표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
“대전환의 시대, 새로운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제안”

15:00-15:10 휴식

패널발표 장석준 정의정책연구소 부소장
“진보정치의 비전, 정책의 전환”

패널발표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불평등 심화와 노동체제, 노동의 대안”

15:10-15:50
패널발표 박진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사장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 전환의 과제”

패널발표 김원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평등전략사업센터장
“젠더갈등을 넘어 성평등 사회를 향한 새로운 도약”

15:50-16:30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16:30-16:40 폐회 및 기념촬영



목차

들어가며		4
기조연설문	“불평등의 시대, 평등사회 건설을 위하여” 조돈문 노회찬재단 이사장	5
주제발표문	“새로운 공화국을 향한 진보정치의 비전과 전략”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교수	21
	“대전환의 시대, 새로운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제안”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	41
패널발표문	“진보정치의 비전, 정책의 전환” 장석준 정의정책연구소 부소장	55
	“불평등 심화와 노동체제, 노동의 대안”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61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 전환의 과제” 박진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사장	71
	“젠더갈등을 넘어, 성평등 사회를 향한 새로운 도약” 김원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평등전략사업센터장	75

들어가며

"노태우, 김대중, 김영삼, 노무현..

87년 개헌 이후 4차례의 정권교체가 있었습니다.

집권정당이 4차례나 바뀌었습니다. 대통령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대통령 얼굴은 바뀌었지만 사회 양극화는 차곡차곡 격차를 벌여왔습니다.

집권당은 바뀌었지만 비정규직은 한시도 쉬지 않고 양산되어왔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그것은 외양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바로,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모두 정책과 이념이 같았기 때문에

사회양극화라는, 동일한 현상이 심화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제6공화국 해체해야 합니다.

대통령 자리 하나 바꿔보는 것이 아닙니다.

집권당 하나 갈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우리 4천만 민중의 족쇄가 되고 있는 이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서

제 6공화국과의 단절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제 7공화국은 그 테제가 발표되었습시다만,

민주노동당의 강령이 최대로 보장하고 있는 마지막 사회는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바꾸기 위한 대장정에 있어서

첫 집권으로 5년 안에 반드시 실현할 것을 테제로 발표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혀 새로운 철학, 전혀 새로운 사상,

전혀 새로운 근본노선으로 우리 사회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 2007.7.17. 선거본부 발대식에서 노회찬 후보의 연설 중

기초 연설

불평등의 시대,
평등사회 건설을 위하여

조돈문

기조연설 불평등의 시대, 평등사회 건설을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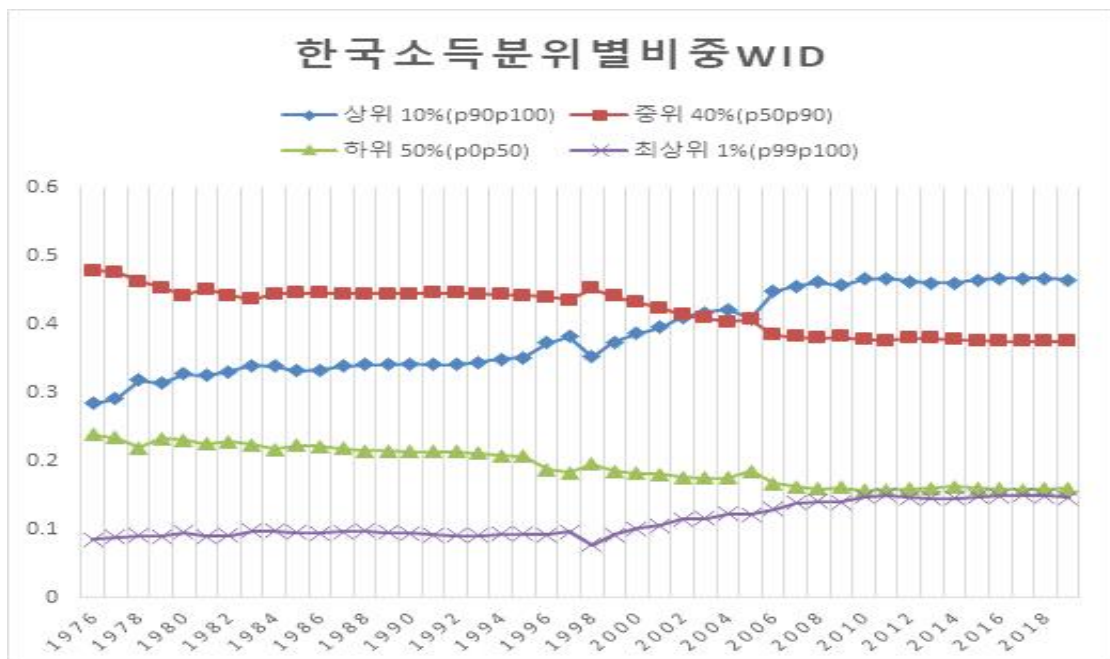
조돈문 노회찬재단 이사장

1. 한국사회의 불평등 심화 추세

○ 한국사회의 불평등은 악화되고 있으며 OECD 최고수준이다.

- * 전체 국민소득 가운데 소득 하위 50% 집단의 점유율은 1970년대 23%에서 2010년대 16%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소득 중위 40% 집단의 소득점유율도 하락했다(〈그림 1 참조〉).
- * 반면 소득 상위 10% 집단의 점유율은 같은 기간 30%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2010년대 46%로 상승했다. 이 가운데 특히 최상위 소득 1% 집단의 점유율이 IMF 외환 위기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여 2010년대 1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소득 상위 1% 집단의 소득점유율이 하위 50% 집단의 소득 점유율과 동등한 것이다.
- * 2010년대 들어 불평등 심화 추세가 완화·진정되면서 소득분위별 소득점유율은 점차 정체를 보이며 균형상태를 형성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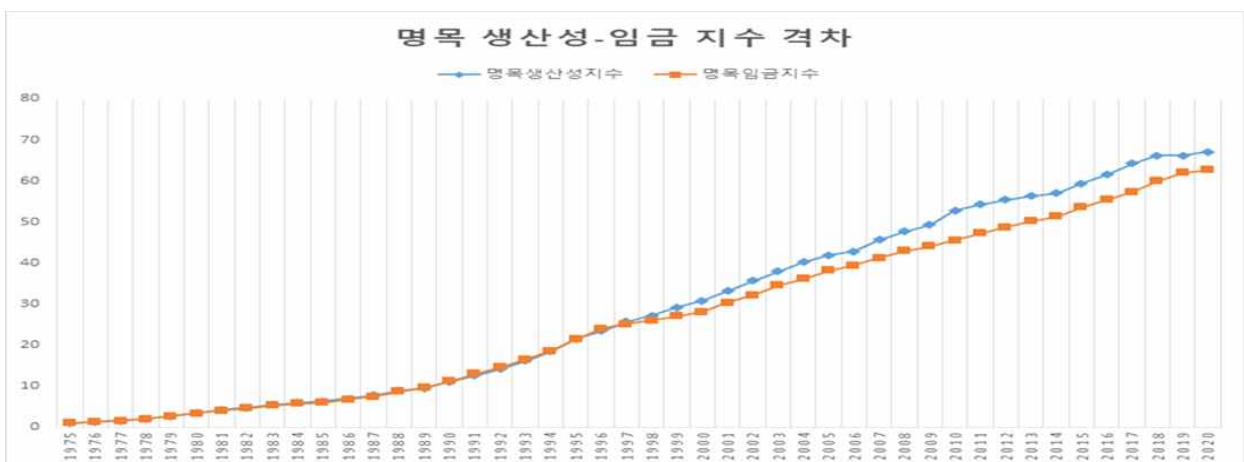
〈그림 1〉 소득 분위 집단별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몫의 변화 (WID 세전소득 기준)



- 피케티는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 심화 추세가 지속될 것임을 경고했는데,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 * 피케티가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역사적 분석을 통해 확인한 자본주의 불평등 심화 메커니즘: “ r (자산수익률) $>$ g (경제성장률)” 부등식 현상 $\Rightarrow \beta$ (자산소득배율) $\uparrow \Rightarrow \alpha$ (자본소득분배율) $\uparrow \Rightarrow$ 소득불평등 $\uparrow \Rightarrow$ 자산불평등 $\uparrow \Rightarrow$ 소득불평등 \uparrow ;
 - * “ r ”(자산수익률)이 일정 수준 유지하는 반면 한국은 저성장시대에 돌입하면서 “ g ”(경제성장률)은 하락후 정체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서, “ $r > g$ ”부등식 격차는 확대 후 정체되고, 그 결과, 자본소득 분배율은 상승 혹은 정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 노동소득 분배율 하락은 노동이 경제성장에 기여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 자본소득 분배율 상승은 노동자들에게는 노동소득 분배율 하락, 즉 노동자들이 노동의 대가로 받는 국민소득의 몫이 축소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그 원인은 노동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의 하락이 아니라 노동의 경제성장 기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 생산성 상승률과 실질임금 상승률의 격차는 IMF 외환위기 이후 확대되기 시작했고, 이러한 확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2〉 참조). 이 격차는 노동이 받아야 할 생산성 향상 기여에 대한 보상을 자본이 가져간 결과, 즉 착취의 결과를 의미한다.

〈그림 2〉 한국의 명목노동생산성과 명목임금 지수 격차, 1975-2020(1975년=1)



2. 불평등 심화 시대의 촛불항쟁

- 2016년 말 촛불항쟁은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으로 촉발되었으나, 불평등 심화 추세 속에서 누적된 촛불민중의 불평등·불공정 현실에 대한 불만이 분노로 폭발한 것이다.
 - * 촛불 항쟁 때 가장 많이 들었던 팻말은 “박근혜 퇴진하라” “이게 나라냐”다.
 - * 박근혜·최순실·이재용게이트는 한국사회 불평등·불공정 상황의 책임이 국가권력과 지배계급에 있음을 확인해 주었다.
 - * 정유라의 “억울하면 부모 잘 만나라. 돈도 실력이다”라는 발언에 시민들이 분노했던 것은 그것이 한국사회의 참모습이었기 때문이다.
 - 노회찬(2018), 『우리가 꿈꾸는 나라』 (“촛불이 준 과제들”, 35-40).

- 자본주의 사회 소득·자산 불평등 확대 재생산 메커니즘은 “소득불평등 ↑ ⇒ 자산불평등 ↑ ⇒ 소득불평등 ↑ ↑”:
 - * 자산불평등이 심화되면 소득불평등은 더욱더 악화되며 세대간 “부의 대물림” 현상이 고착되고 세대간 계급위치가 승계되며 계급이동은 점점더 희소하게 된다.
 - * 이는 우리사회가 “금수저-흙수저”의 수저계급사회임을 의미하는 것인데, 정유라가 이를 상기시켜준 것이다.

- 가족 배경이 중요하다는 의견은 2009-21년 사이 꾸준히 증가했는데, 우리 사회의 수저계급 사회 성격이 점점더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해 준다(〈표 2〉 참조).
 - * 특히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의견과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이 2014-2021년 사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는 가족배경 중요성이 급격하게 더 커져서라기보다 정유라·조국 사태가 불평등·불공정 사회 지배집단의 민낯을 보여주며 불평등·불공정성 현실에 대한 불만을 증폭시키고 의식을 고양시킨 효과가 개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1〉 귀하는 인생에서 성공하는데, “부유한 집안 출신”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구분	한국 KGSS			ISSP 2009년			
	2009	2014	2021	스웨덴	독일	스페인	미국
중요하지 않다	19.6	16.4	10.8	52.7	36.8	38.2	37.4
중요하다	80.2	83.7	89.0	47.3	63.3	61.7	62.7
절대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44.4	44.6	62.5	13.5	28.8	32.4	30.5

3. 2022년 대선: 불평등 심화 시대 노동 없는 대선

- 불평등 심화 추세 속 2022년 대선은 평등 가치가 실종된 가운데 “노동 없는 대선”으로 치러졌고, 당선자는 주요 후보 3명 가운데 가장 반(反)노동적 입장을 지닌 후보였다(매일노동뉴스 2022.2.14).
- 불평등 심화 시대의 평등 가치 실종된 “노동 없는 대선”과 “반(反)노동 후보 당선”이 의미하는 바는 두가지다.
 - * 첫째, 양대정당 후보의 역대급 비호감에도 유권자들은 친노동 진보후보를 외면하며, 진보정당의 실패를 확인해 주었다.
 - * 둘째, 민주노동운동의 추락한 사회적 위상과 노동계급의 미미한 사회적 존재감을 반영한 것이다.
 - * 이 두 가지 모두 노동계급 계급형성 실패와 노동계급 정치세력화 실패의 후과이다.
- 유럽과 중남미는 경제위기 이후 시작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부정적 효과를 경험하며 좌파정당 재집권을 불러왔지만, 한국은 우파 신자유주의 세력의 집권을 통해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더욱더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표 2〉 참조).
 - * 유럽은 2차대전 이후 포드주의 계급타협에 기초하여 노동기본권 법제화와 복지국가 건설을 통해 불평등을 완화하는 한편 노동계급 계급형성과 정치세력화를 진전시켰다. 이것이 신자유주의 폐해에 대한 좌파정당 재집권의 반격을 가능하게 했다.
 - * 한국은 포드주의 계급타협도 없고 좌파 재집권도 없었다. 그 결과 불평등은 심화되고 노동계급 계급형성과 정치세력화는 진전될 수 없었다.
 - * 이처럼 한국의 불평등 심화와 노동계급 계급형성 실패는 서로 인과적으로 보강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해왔다.

〈표 2〉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관련 시기적 변천의 국가 간 비교

구분	경제위기 이전 시기	경제위기 시기	신자유주의 시기	신자유주의 이후
유럽	포드주의 계급타협	경제위기	신자유주의	좌파 재집권
시기 구분	1945-70년대 중반	1970년대 후반	80년대-90년대 초반	1990년대 중반
중남미	군사독재정권	경제위기	민주정권/신자유주의	좌파 재집권
시기 구분	1960-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한국	군사독재정권	민주화/경제위기	민주정권/신자유주의	우파 신자유주의
시기 구분	1961-87	1990년대 후반	1998-2008년	2008년-

- 윤석열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전략을 비판하고 규제완화와 감세정책에 기초한 이윤주도성장 전략을 표방하며 출범했다.
 - * 윤석열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시장중심주의 기초 하에서 노동시장 유연화와 민주노동운동 무력화를 추진한다.
 - * 윤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은 하나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정부와 기업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기업”(2022.6.16)이라고 선언하며 국가의 자본계급적 성격을 분명히했다.
 - “집이 국가다”라고 선언했던 절대왕정 군주 루이14세 태양왕을 연상시킨다. 다만 권력 주체가 절대왕정에서 시장과 자본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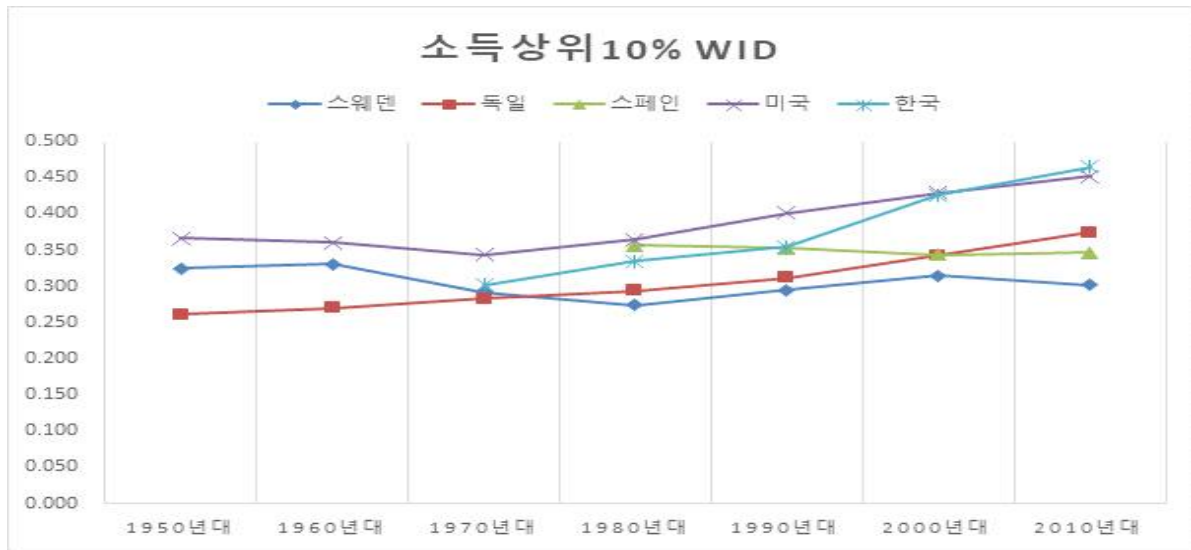
- 대처·레이건의 신자유주의가 불평등을 심화시켜 좌파정당 재집권을 불러왔듯이, 윤석열정부의 시장중심주의, 시장만능주의로 인한 불평등 심화 추세는 시민들의 불만을 증폭시키며 다시 평등과 공정의 가치를 소환할 것이다.
 - * 시민들이 상호적 공정성 원칙까지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다고 판단하게 되면 시민들의 불평등·불공정 상황에 대한 불만은 분노로 폭발할 수 있다.

4. 민주노동운동과 진보정치의 대안은? Why not Sweden?

- 자본주의 역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30년을 포드주의 계급타협에 기초하여 안정적 경제성장, 복지국가 형성, 완전고용 실현, 실질임금 인상을 통해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성공했다.
 - * 이 시기는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capitalism with human face)”, 자본주의 황금기로 평가되고 있다.

- 포드주의 이후 신자유주의 세계화 추세 속에서 불평등은 다시 악화되기 시작했지만, 자본주의 국가들의 대응 방식은 시장경제모델에 따라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 * 자본주의 다양성 속에서 스웨덴 등 스칸디나비아모델 국가들은 불평등 수준이 급격히 악화된 미국 등 자유시장경제모델 국가들과는 대조적으로 공존·상생의 계급관계를 유지하며 불평등 악화를 억제하는데 상대적으로 성공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그림 3) 참조).

〈그림 3〉 소득 상위 10% 집단의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몫 국제비교 (WID 세전소득 기준)



- 노회찬은 우리가 꿈꾸는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의 경험적 준거로 스웨덴 등 스칸디나비아 모델 국가들을 지목했다.
 - * “진보정당이 꿈꾸는 건 희한한 세상이 아니에요. 꿈과 현실을 모두 소중히 여겨야 하지만 어차피 현실은 현실입니다. 진보 정당이 만들고자 하는 현실은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같은 나라입니다.” (노회찬 2015)
 - *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이 가장 잘 실현되고 있는 것이 사민주의라고 본다. 이 이상으로 진도 나간 체제가 있는가? 현실 사회주의국가보다 노동권이 더 많이 보장되고 있는 곳이 사민주의국가다. 사민주의가 사회주의적 이상이 실현될 수 있는 완결태는 아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것이 가장 앞서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지향점으로 삼았다” (노회찬 2014; 조현연 2021).
 - * 실제 진보정의연구소의 2013년 1월 조사에서 진보정의당 간부들의 91.6%가 “바람직한 국가모델”로 “스웨덴형”을 선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조현연 2020).
- 국내의 스웨덴에 대한 평가는 다양한데, 비판적 입장은 두 가지로 대별된다.
 - ① “스웨덴 북극성” 입장: 스웨덴은 노동계급 계급형성이나 발전된 복지국가 형성 등 한국 사회와 조건이 매우 다르다는 점에서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북극성처럼 꿈같은 나라다.
 - ② “스웨덴 개량주의” 입장: 스웨덴 등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은 여전히 자본주의 사회가 지닌 문제점들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해서 사회주의 같은 더 급진적 대안이 필요하다.

○ 스웨덴은 북극성인가?

- * 영국의 중도 우파 잡지 Economist지(2013.2.2)가 미국의 불평등 심화 현상을 비판하고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통합을 동시에 실현한 스웨덴의 성공을 극찬하면서 여타 국가들로 하여금 스웨덴을 벤치마킹할 것을 독려했다.
- * 유럽연합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추세 속에서 영미형 자유시장경제 모델에 맞서 유럽연합 국가들이 보여온 사회통합의 강점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경제적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 유럽의 사회적 모델(European social model)을 제시했는데, 스웨덴 등 스칸디나비아국가들은 그 경험적 준거가 되었다.
- * Economist나 유럽연합의 권고는 스웨덴 모델에 상대적으로 근접한 독일 등 대륙형 조정 시장경제모델 국가들뿐만 아니라 스페인 등 지중해형 국가들은 물론 헝가리 등 동구권 국가들도 겨냥한 것이며, 노동계급과 진보정당은 물론 자본계급과 보수정당도 겨냥했다.
- * 그런 점에서 스웨덴은 도달할 수 없는 북극성이 아니라 경제발전 정도, 노동계급 조직력, 진보정당 영향력, 이념적 지향과 무관하게 각국의 여건에 맞게 “맥락적 벤치마킹(contextual benchmarking)”해야할 대상이라 할 수 있다.
- * 현재의 스웨덴이 일거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1932년 사민당이 최초 집권한 이래 90년의 시간이 경과되는 동안 스웨덴 모델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형성되어 왔고, 아직도 스웨덴 모델의 실험은 현재진행형이다. 스웨덴에 대한 맥락적 벤치마킹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스웨덴의 성공은 물론 임노동자기금제 사례처럼 스웨덴의 실패에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다.
- * 무엇보다도 스웨덴 모델은 노동계급, 여성, 다양한 사회적 약자 집단들의 적극적 참여는 물론 국민적 지지 속에서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주체 형성과 국민적 지지 형성의 중장기적 접근이 요구된다.

○ 스웨덴을 입에 담으면 개량주의인가?

- (1) 스웨덴을 경험적 준거로 삼는 것은 스웨덴이 완전무결한 사회라서가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들 가운데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문제점을 상대적으로 더 잘 극복하고 보다 평등한 사회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 * 스웨덴은 사회주의 국가로 분류되는 중국보다도 더 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소득 상위 10% 집단의 소득 점유율은 스웨덴이 29.6%로 중국의 41.7% 보다 월등히 더 낮은 반면, 소득 하위 50% 집단의 소득 점유율은 스웨덴이 24.3%로 중국의 14.4% 보다 훨씬 더 크다.

- * 스웨덴은 자본주의 국가는 물론 사회주의 중국보다 더 평등하다는 점에서 현존하는 국가들 가운데 가장 평등한 국가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 (2) 스웨덴은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대변하는 노동계급과 자본계급이 공존·상생하고 경제·정치 권력을 공유·분점하는 모범을 보이고 있다.
- * 스웨덴은 자본계급이 일방적 계급지배를 포기하고 노동계급과 공존·상생하는 포지티브섬 전략을 실천하고 있다.
 - * 공동결정제와 노동조합 대표 이사제 등 제도적 장치들과 함께 경제민주주의가 여타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잘 실행되고 있다. 정지된 작업대에서 대량생산차를 조립하는 우데발라 공장의 성찰적 생산방식은 자본주의 국가는 물론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었는데, 노동·자본의 공동결정제를 통해 설계·시행되었다.
 - * 스웨덴은 정당비례대표 선거제로 다양한 사회세력의 정치권력 분점·공유를 정치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어, 천안문 학살이나 홍콩 민주화운동 탄압의 중국은 물론 거대 양당 국가권력 독점의 미국·한국에 비해 정치적 민주주의가 훨씬더 잘 실천하고 있다.
- (3) 스웨덴은 여성은 물론 어떠한 범주의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도 차별처우하지 않고 사회적 존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며 사회통합을 실천함에 있어 여타 국가들보다 더 앞서 있다.
- * 성평등 측면에서 보면 국회의원 여성 비율, 대기업 고위 경영진 여성 비율, 노동시장의 성별 고용율격차와 성별 임금격차, 가정내 남녀간 가사노동 분담과 자녀 양육 분담 등 거의 모든 성평등 지표들에서 모범을 보이고 있다.
 - * 아빠의 자녀 육아 휴가 사용비율도 여타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높는데, 법제도 적으로 유급육아휴가 기간 가운데 각 부모 사용 기간을 3개월로 설정해두었다. 최근 각 부모 사용기간을 2개월에서 3개월로 상향조정한 것은 생산직노총 IO와 시민당이 주도한 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 * 스웨덴이 여성은 물론 다양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집단들을 포용하며 사회통합을 잘 이룰 수 있게 된 데는 두가지 요인이 크게 기여했다. 첫째, 시민당이 적극적으로 이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왔다는 점, 둘째, 스웨덴의 광역 정당비례대표 선거제로 제 사회세력들의 정치권력 분점과 사회적 합의 도출 노력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 (4)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통합을 동시에 실현하는 스웨덴 모델의 수월성은 현실세계에서 상당한 역사적 기간 동안 경험적으로 검증되었다.
- * 스웨덴 모델이 보여주는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통합은 법·제도의 작동 성과인 동시

에 스웨덴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사회세력들이 협력, 갈등, 각축의 관계 속에서 누적된 실천의 결과물이다.

- * 스웨덴 모델은 스웨덴 시민당이 1932년 최초 집권한 이래 현재까지 전체 기간의 80%인 70년을 장기집권하며 현재의 스웨덴 국가를 만들었다.
- * 스웨덴 모델은 거의 1세기에 달하는 기간 동안 다양한 시행착오 끝에 이룩한 평형 상태라 할 수 있으며, 스웨덴 사회라는 실험실에서 그 작동 가능성이 검증되었다.
- * 스웨덴 모델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스웨덴 모델을 만들고 수정보완하고 방어해온 시민당에 대한 평가와 지지로 나타났으며, 시민당이 집권 기간은 물론 실권기간에도 단 한번도 제1당 지위를 빼앗긴 적 없다. 이는 스웨덴 국민들의 스웨덴 모델에 대한 공고한 지지를 의미하며, 스웨덴 모델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그리고 불가역성을 확인해 준다.
- * Economist와 유럽연합 등이 스웨덴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강력 추천하는 것은 이처럼 스웨덴 모델의 수월성은 단순한 가설적, 이론적 모델이 아니라 현실세계에서 실현되었고 오랜 기간 경험적으로 검증되었기 때문이다.

(5) 스웨덴 모델은 공격과 방어의 계급 동학 속에서 형성·개혁·해체·재형성의 과정을 거치며 균형·불균형 상태를 이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계급 역학관계의 함수라 할 수 있다.

- * 스웨덴 사회는 노동계급이 주도하여 계급형성의 성과와 시민당의 높은 지지율로 세계 최강 자본계급에 맞서 계급동맹과 계급연합을 통해 건설하고 방어·개선해 왔다.
- * 대안사회는 진공상태에서 만들어지는 이론적, 가설적 가능성이 아니라, 주어진 계급역학관계 속에서 현재의 국가를 개조·변혁하며 대안사회로 전환하는 것이다.
- * 오늘의 스웨덴도 주어진 자본주의 사회의 제약과 계급 역학관계의 조건 속에서, 노동계급을 위한 최선의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한 결과물이다.
- * 스웨덴 모델보다 더 친노동적이고 변혁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스웨덴 노동계급보다 자본계급을 더 압도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노동계급 계급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6) 스웨덴은 평등과 사회통합을 진전시키며 대안사회 모델로 이행하는 동시에 사회진보를 주도할 사회세력의 주체형성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대안사회 이행전략에 충실한 이행경로를 보여주었다.

- * 스웨덴이 스웨덴 모델의 수혜자를 양산하며 노동계급의 계급형성을 진전시키고 여성과 사회적 약자들의 주체형성을 통해 개혁의 축적 과정을 거치며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개혁을 가능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대안사회로의 이행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해왔다. 그런 점에서 개혁의 혜택·성과에 안주하게 하는 비스마르크형 개량주의가 아니라 개혁을

축적하며 사회변혁으로 진전하는 비개혁주의적 개혁 전략의 한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 * 스웨덴은 유의미한 이행경로를 경험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스웨덴 사회보다 더 나은 대안 사회 모델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스웨덴을 우회하기보다 스웨덴을 경유하는 것이 이행전략의 성공 가능성을 확보하는 합리적 선택이 될 수 있다.

5. 노동과 진보정치의 대안사회 모델: “풍요로운 평등사회” “제7공화국”

- 한국사회의 사회변혁을 추구하는 민주노동운동과 진보정치세력이 지향하는 대안사회의 모델은 2000년 1월 출범한 민주노동당의 강령(민주노동당 2000)과 2000년 민주노총 발전전략 위원회의 대안사회 모델(민주노총 2000)에 잘 집약되어 있다.

- * 이 시기는 1995년 민주노총 출범과 1996-97년 노동법개정 통과업투쟁 승리로 민주노동운동과 진보정당 중심의 사회진보 전망에 대한 확신이 강했던 시기였다.

- * 민주노동당 강령은 전문에서 사적 소유를 허용하되 소유권을 규제하고 생산수단을 사회화하는 한편 시장 중심으로 자원배분하되 사회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대안사회 모델의 핵심 원칙으로 제시했다.

- * 민주노총 발전전략 위원회가 “민주노총의 이념적 지향과 전략의 이념·전략”에서 제시한 대안사회는 이를 구체화하고 “풍요로운 평등사회”라 명명했는데, 이는 스웨덴 사민주의 모델에 민주적 시장사회주의 지향을 결합한 것이다.

- 평등사회의 운영원리로 공공적 소유가 지배적인 사회, 자원배분이 사회적으로 조절되는 사회, 민주적인 참여와 통제가 이루어지는 사회를 제시했다.

- 평등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행을 위한 정책과 국가권력의 전화, 공공적 소유를 지향하는 사회화정책, 시장적 조절의 제한과 국가적 조절의 확대·강화, 자본가적 통제를 제한하는 민주적 노동자 통제, 대외종속적 자본주의의 청산과 개방적 자립경제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 노회찬 의원은 2007년 7월 “제7공화국 건설운동”을 선포한 바 있었는데, 제7공화국도 진보정치세력의 전망을 공유한 대안사회 모델에 대한 또 하나의 구상이라 할 수 있다(노회찬 2007; 장석준 2019).

- * 제7공화국 건설 운동은 노동자·농민·서민의 진보정당이 집권하여 신자유주의 체제를 해체하고 평등과 통일의 가치에 기초한 새로운 공화국, 제7공화국을 건설하는 운동이다.

- * 제7공화국의 11대 테제는 반신자유주의 테제, 4대 기본권 테제, 통일 테제, 평화 테제, 차별철폐 테제, 사회화 테제, 노동 테제, 농업 테제, 성평등 테제, 녹색국가 테제, 국민주권 테제로 구성되며 제7공화국의 핵심적 운영 원칙을 표현하고 있다.
 - * 교육, 의료, 주택 일자리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4대 기본권 테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고 노동3권을 완전하게 보장한다는 노동 테제, 장애인, 성소수자, 노인,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일체의 차별을 철폐하는 차별철폐테제는 불평등을 완화하는 구체적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민주노동운동과 진보정치세력이 지향하는 대안사회모델 건설의 가능성은 2016-17촛불항쟁에서 확인되었다.
- * 진보정치인 노회찬(2018)과 경제학자 이정전(2017)은 촛불항쟁을 불평등·불공정 현실에 대한 분노를 표출한 것으로 평가했다.
 - * 촛불민중의 불만은 “이게 나라냐”라는 팻말로 표현되었다. 촛불민중이 염원한 “나라다운 나라”는 평등과 공정의 가치가 실현된 나라를 의미한다.
 - * 풍요로운 평등사회와 제7공화국은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로 촛불항쟁을 통해 우리사회의 보편적 이해관계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 스웨덴 사회를 경험적 준거로 하고 다양한 대안사회 모델들을 참조하여 평등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유의미한 정책대안들¹⁾ 가운데 소득불평등과 자산불평등을 완화하는데 직접적 효과가 큰 정책들을 발췌하여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 건설 위한 자산·소득 불평등 해소 방안²⁾

자원 유형	특성	접근법 원칙	정책 대안*
<소유 자산 & 자산 수익>			
생산적 자산 (자본)	경제 기여 높음 국가간 이동성 높음	소유구조 개입	사회적 소유 확대/ 공동소유 공동경영(cogestión)
		소유권(이윤처분권) 개입	대·중소기업 이익균점/사적자본 이윤의 공익적 활용/임노동자기금제
비생산적 자산 (토지, 건물 등 부동산)	경제 기여 낮음 국가간 이동성 낮음	자산수익(지대·블로 소득)사회적공유	누진세율 자산보유세/ 청년 기본자본 지급

1) 스웨덴, 풍요로운 복지국가, 제7공화국, 참여사회주의, 시장사회주의, 민주적 시장사회주의 등 대안사회 모델들에 대해서는 Piketty(2014, 2020), 노회찬(2007, 2018), 민주노총(2000), 민주노동당(2000), Roemer(1994), 조돈문(2002, 2019, 2022)을 참조할 것.
 2) 정책대안들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조돈문(2022)를 참조할 것.

자원 유형	특성	접근법 원칙	정책 대안*
〈노동 소득: 분배〉			
노동소득	노동의 대가	생산성 기여 보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최저임금제, 생활임금제/최고임금 규제
〈노동 소득: 재분배〉*			
노동계급 임금 소득	가치생산 보상	물적 생존 보장	최저수준 소득세율
중간계급 임금 소득	가치생산 보상&지대	충성·기술재 지대 높은 세율	누진세율 소득세
경영진 보수	사용자성 자기 급여	자기 책정 급여 사회환원	높은 최고세율 누진적 소득세

* 재정지출은 보건의료 및 교육 등 공공서비스, 공공·사회 주택 등 집합적 소비재, 국민 연금과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기타 이전소득 등으로 소득 재분배 기능을 수행함.

6. 평등사회 이행전략과 주체 형성 과제

- 평등사회를 지향하는 사회변혁은 불평등 사회의 기득권 세력, 즉 지배계급과 보수 정치권력의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 * 지배세력이 보유한 물질적·정치적·상징적 자원의 위력적 동원에 맞서 평등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대안사회 모델의 정책 패키지 설계만으로는 부족하다.
 - * 불평등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는 노동계급을 포함한 사회세력들이 유의미한 사회·정치적 행위주체들로 형성되어 국가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제도·정책들을 수립·집행하도록 한 결과로 스웨덴에서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가 형성될 수 있었다. 그것이 Korpi 등 권력자원이론(power resource theory)의 설명이다.
- 평등사회를 향한 사회변혁에 일정한 진전을 이룬 해외 경험들을 보면 평등사회 이행을 추진하는 정치적 행위주체와 사회세력들이 개혁동맹을 형성하여 사회변혁을 추진하고 기득권세력의 퇴행 기도를 저지하며 변혁 성과를 방어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 스웨덴에서는 생산직노총 LO와 시민당이 노동계급 계급형성 진전과 함께 노동-농민 계급동맹을 구축하여 보편적 복지국가를 형성하고 노동-중간 계급연대를 통해 경제적 민주주의를 진전시켜 오늘의 스웨덴 모델 사회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했다.
 - 그렇게 도입하여 실행한 제도·정책들은 렌·마이드너 재정경제정책 모델, 초기업수준

단체교섭 제도화, 공동결정제와 노동조합대표 이사제, 임노동자 기금제, 연대임금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이중구조의 공적 실업자 소득보장제도, 보편주의 기초연금제, 공적 보건의료 서비스제도 등이다.

- * 브라질에서는 노동조합총연맹 CUT와 노동자당 PT가 도시주민운동과 진보적 시민사회운동과 함께 개혁동맹을 형성하여 참여예산제, 산업별 부문협의회, 최저임금 배가 정책, 농지개혁, 보건의료체계 통합, 가족지원금제도(bolsa familia)와 취학아동지원금제도(bolsa escola) 중심의 빈곤퇴치(fome zero) 운동 등을 통해 노동계급과 도시주민들을 세력화하며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었다.
- * 베네수엘라에서는 차베스의 정치조직과 비공식부문 도시빈민 공동체운동이 민주노조운동과 함께 개혁동맹을 형성하여 사기업 국유화와 공동소유 공동경영(cogestión) 전환, 주민 참여 공동체위원회(Consejos Comunales), 교육개발, 보건의료, 생필품유통 등 다양한 사회개발 프로그램(Misión) 도입을 통해 생산현장의 경제민주주의, 정치적 직접민주주의, 반부패 사회정책을 통해 노동자와 도시빈민을 세력화하고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었다.

○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의 포드주의 시기와 스웨덴의 경험, 브라질과 베네수엘라의 경험이 주는 시사점은 자명하다.

- * 평등사회로의 이행전략은 대안사회 구성 정책요소들을 도입·실행하며 소득불평등과 자산불평등을 완화하고 대안사회 모델로 나아가는 동시에 사회변혁을 주도할 주체의 형성을 진전시키는 효과도 거둘 수 있어야 한다.

○ 노동계급과 중하층 서민들의 주체 형성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는 정책수단들은 두 가지로 나누어 진다.

(1) 주체 형성을 어렵게 하는 제약요인들을 제거하여 조직화·세력화에 유리한 구조적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 * 포드주의 시기 유럽국가들에서 단체결성권과 단체교섭권을 포함한 노동3권을 법·제도적으로 보장한 조치들, 대공황 이후 미국의 뉴딜 노사관계 제도화 조치들이 노동자 조직화 진전에 큰 기여를 했음은 경험적으로 검증된 바 있다.
- * 브라질의 노동자당과 베네수엘라의 차베스가 참여예산제와 공동체위원회 등 주민참여 직접민주주의 제도적 장치들을 도입·활성화하여 도시 빈민들을 조직화하여 보수 정치 세력을 제압한 것도 좋은 예다.

* 한국은 포드주의 계급타협 시기를 결여했다는 점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의 근로자 개념을 확대하여 사용종속성의 고용관계 조건과 무관하게 모든 임금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여 조직화를 진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

(2) 정책대안 요구의 실질적 수혜자를 목적의식적으로 겨냥하여 정책의 즉각적 혹은 잠재적 수혜자들을 배출하여 자율적·비자율적 조직화의 구심점과 조직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신자유주의 세계화 추세와 함께 시작된 스웨덴 보편주의 복지제도에 대한 자본과 보수 정치세력의 공세에 맞서 스웨덴 복지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정치·사회 세력들의 복지동맹이 형성되었다. 스웨덴의 보편주의 복지국가는 노동계급이 농민계급과 계급동맹을 통해 건설했으나, 복지국가를 방어하는 복지동맹에서는 여성이 노동계급의 주요한 동맹세력으로 역할을 수행해 왔다.

- 여성은 복지국가의 수혜자로서 복지국가를 방어하는 한편 복지국가를 수립한 사회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을 점점더 높여갔다. 여성은 남성보다 노동조합 조직률과 사회민주당 지지율이 더 높은 반면 극우정당에 대한 지지율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복지국가 수혜자 효과”라 할 수 있다.

* 미국의 경우 노동계급은 물론 중하위층 서민들의 조직화가 전반적으로 미약한데, 연금생활자협회(AARP)는 연금정책의 수혜자들로 사후적으로 조직되었으나 3000만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막강한 단체가 되었다.

- 연금생활자협회는 미국 내에서 전미총기협회와 전미유태인협회와 함께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지닌 3대 단체 가운데 하나가 되었으며, 보수정치세력에 의한 공적연금제도의 시장화 기도를 성공적으로 저지하고 있다.

-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자살율과 노인 빈곤율로 노인들의 삶의 질이 매우 열악하다는 점에서 한국의 노동과 진보 정치세력은 미국 연금생활자협회 사례를 참조하여 국민연금 강화 등 국가의 사회보장 기능 강화를 통해 고령자의 권리의식을 배양하면서 보수정당의 고령자 지지기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고자료〉

- * 노회찬(2007). “평등·통일의 〈제7공화국〉 건설을 위한 11대 테제”, 2007.7.17.
- * 노회찬(2015), “진보 정당이 추구하는 사회는 북유럽”, [대담 손민규 채널에스. 2015.1.
- * 노회찬(2018), 『우리가 꿈꾸는 나라』, 창비.
- * 노회찬·구영식(2014), 『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 비아북.
- * 민주노동당(2000), 민주노동당 강령. (2000.1).
- * 민주노총(2000). 《노동운동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2000.10.16. 종로성당.
- * 이정전(2017). 『주적은 불평등이다: 금수저-흙수저의 정치경제학』. (개마고원).
- * 장석준(2019), “노회찬이 남긴 꿈, 제7공화국”, 한겨레. 2019.7.18.
- * 조돈문(2002), “국가사회주의 실패와 대안체제의 가능성: 평등과 효율성에 기초한 ‘민주적 시장 사회주의’의 모색”, 『동향과 전망』, 제52호 (봄호).
- * 조돈문(2019), 『함께 잘사는 나라 스웨덴: 노동과 자본, 상생의 길을 찾다』, (사회평론).
- * 조돈문(2022), “불평등시대의 평등사회 건설 프로젝트: 대안 & 전략”. 민주노총 강좌. 2022.3.3.
- * 조현연(2021), “[노회찬의 나라 밖 인물 산책 ③]. part3 북유럽 복지모형을 만나다: 올로프 팔메
시 젊은 정치를 보고싶다...왜 한국정치를 '19금'에 묶어놓나”. 프레시안, 2021.12.07.
- * 조현연(2020), “[프리미엄 기록으로 만나는 노회찬의 꿈과 길. 11회 진보정당 집권하면 어떤 세
상 오나요?... 노회찬의 대답”, 오마이뉴스, 2020.06.23.
- * Piketty, Thomas(2014). Capital in Twenty-First Century. (Cambridge: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장경덕 외 옮김. 2014. 『21세기 자본』. 글항아리]
- * Piketty, Thomas(2020). Capital and Ideology. (Cambridge: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안준범 옮김. 2020. 『자본과 이데올로기』. 문학동네]
- * Roemer, John E.(1994a). Future for Socialism.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주제 발표

새로운 공화국을 향한 진보정치의 비전과 전략

김윤철

주제발표

새로운 공화국을 향한 진보정치의 비전과 전략³⁾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1. 왜 ‘새로운 공화국’인가?

1) 아직 이루지 못한 혹은 왜곡된 ‘공화(共和)’의 원리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국가 구성의 이념과 원리인 민주, 공화 모두 제한적 혹은 왜곡.
- 이중의 불평등
 - 사회경제적 불평등: 소득 및 자산 격차의 심화

〈표1〉 소득 불평등 비교 (2020년 세전 소득기준, WID 통계)

	상위10%			하위 10%		
	최상위1%	차상위9%	소득합계	중위40%	하위50%	소득합계
스웨덴	10.5%	20.3%	30.8%	45.4%	23.8%	69.2%
미국	18.8%	26.7%	45.5%	41.2%	13.3%	54.5%
한국	14.7%	31.8%	46.5%	37.5%	16.0%	53.5%

* 자료: 세계불평등데이터베이스(World Inequality Database, WID 2020)

: 주목할 지점은 차상위 9%의 소득점유율이 스웨덴이나 미국보다도 높다는 것(소득액 기준 5-6천만원 대). 특히 양대 노총 조합원과 진보 주도층 대부분이 이에 속한다는 것. 이들은 저소득층(사회적 약자층과 달리) 교섭 권력 행사를 위한 정치·사회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층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표2〉 상·하위 10% 1인당 평균소득 (원)

	2016	2017	2018	2019	2020	2020-2016
상위 0.1%	1,290	1,474	1,471	1,517	1,662	371
상위 10%	122	127.91	130.55	132.55	136.26	14.29
하위 10%	1.78	1.86	2.00	2.07	1.96	0.17

* 자료: 국세청(2020)

3) 본 발표자는 작금의 시기에 ‘새로운 공화국 건설’이라는 말 자체가 진보 정치가 내세울 표어로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음을 밝혀둔다. 이 발표문에서 ‘새로운 공화국 건설’이라는 말은 ‘공화(주의)’ 원리에 기초한 혹은 지향하는 새로운 정치·사회 질서에 대한 구상(정치재설계)을 뜻한다. 이는 ‘정치의 본질’을 구현해야한다는 뜻도 갖고 있다.

: 이 자료에서도 상위층은 상승액이 높은 데 반해, 하위층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 또 그 격차가 점차 더 커져왔다는 것에 주목해야 하는 바, 이 역시 교섭 권력 행사를 위한 정치·사회적 자원의 보유 여부와 함께 살펴야 할 대목.

- 정치적 불평등: 양대 정당 열성 지지층의 과대 대표와 사회적 약자의 소외와 주권자적 지위의 훼손

: 최근 들어 소득격차에 따른 투표율 격차는 감소 추세(<https://www.oecdbetterlifeindex.org/countries/korea/>). 그러나 19대 대선 기준으로만 볼 때에도 상위 20%는 92% 투표 참여한데 비해 하위 20%는 60% 정도가 투표(전체 평균보다도 낮음)해 무려 32%의 격차. OECD 평균 13% 정도. 2003년 이후 역대 선거 유권자 분석에 따르면 중위소득 기준으로 고소득층은 투표할 확률이 20% 포인트 정도 더 높고 저소득층은 중위소득보다 15% 정도 투표를 더 안 하는 경향 확인(<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705107?sid=100>).

: 사회적 약자 교섭 권력(bargaining power)을 행사하기 위한 정치적 자원의 미보유 혹은 동원 역량의 취약함(중상층 이상의 정치 자원 독점 경향).

: 노조조직률은 최근 들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2020년 기준 14.2%로 27년 만에 최고). 그러나 여전히 공공부문 노조원이 압도적 비중(69.3%)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민간 부문과 비정규직과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의 조직화는 여전히 지체되고 있음.

2) 비전을 상실하고 사유화된 정치

○ 문명 전환기로 일컬어지는 대내외적 정치경제 사회문화 질서의 급격한 변동기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에서조차 국가 비전을 주되게 다루지 않는(‘무의미의 축제로 점철된’) 주류 정치.

** 정치의 시장화 / 상품화

** 국가 비전이 쟁점과 선거 승패의 관건이 되지 못하는 정치 시장의 조성

○ 대안적 국가 공동체상을 제시하지 못하고 제도 내 비주류 엘리트들의 자기 신념 추구 성

향의 표출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진보정치.

○ 양대 정당 열성지지층 등과 같은 특정 집단의 선호와 사적 감정의 표출과 대자본(유착) 세력과 중상층 등 자산 보유층의 사익 추구 성향이 주도하는 정치.

○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비전마저 힘을 잃은 정치.

- 최근 정권교체기를 전후로 해 ‘경제정의’ ‘경제민주화’ 등의 용어는 거의 실종. 공화 구현을 위한 헌법상의 경제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적 소유권의 절대화 담론이 압도적. 특히 재벌 대기업 소유의 경제지와 (신)자유주의 경제학계 등이 이를 적극적으로 유포.

○ 국가 공동체 유지와 발전을 위한 갈등의 공적 해결을 위한 실천으로서의 정치(res publica-politics)의 실종.

* 사익 추구의 교두보와 면허권을 얻거나 사익추구를 위한 권력 작용에 대한 공적 인정의 상징을 확보하기 위한 의례적 실천으로 전락.

○ ‘약탈적 능력주의’의 지배이데올로기화와 삶의 비용을 원자화된 개인이 전담하는 ‘과잉주체’의 양산과 국가공동체의 ‘해체’. 즉, 공화 원리 작동의 차단 혹은 붕괴.

- ‘주거환경권’ 등이 헌법적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주식 투자 관련 무한경쟁-적자생존-승자독식의 양상을 띠며 나타난 ‘영끌 현상’은 과잉주체를 양산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임.

- 절차성과 확실성에 침식되어있는 공정담론의 성격도 ‘경쟁=전쟁’이 되어버린 과잉주체의 삶의 현실에서 비롯된 것.

** 2016-2017 촛불집회는 ‘평화적 혁명 가능성’이라는 환상을 갖게끔 했으나, 시민사회가 ‘부당한 (대통령) 정치권력에 대한 항의-주어진 제도적 해결-선거게임으로의 귀환과-사적 이익 추구라는 일상 삶의 지속’이라는 회로망에 갇혀 있음을 확인시켜 줌. 한국 시민사회의 ‘시민성’의 발현은 딱 ‘오만한 기성 정치권력의 사익추구’에 대한 응징이라는 선(‘마지노선 민주주의’)까지인 것임. K-democracy(론)의 허구성(한국판 ‘포스트민주주의’=‘마지노선 민주주의’).

2. 새로운 공화국 구상의 전제

1) '공화'(주의)의 의미

- res publica 공적인 것, res=thing, event, business, fact, cause, property (=) res familiaris).
- 공화주의는 일본의 조어. 1850년대 공화국=왕 없이 지배되는 나라라는 의미, 공화국과 함께 공치국, 공화정치 등의 단어 등장.
- 중국춘추시대 『사기』의 주본기에 왕이 아닌 신하 공동협력하여 통치하던 고대 주나라 시대를 '공화' 시대로 기록. 한국에서는 1895 유길준 『서유견문』에서 정체의 한 종류로 등장.⁴⁾
- 공화주의의 '계보'
 - 아리스토텔레스. 아테네형 공화주의, 고전적 공화주의, 시민적 공화주의, 공동체주의. 정치공동체(politike koinonia) 참여와 공공선의 실현을 강조.
 - 키케로. 신로마형 공화주의. 시민의 자유와 법 강조. 정치공동체(국가)=시민들의 권리의 결사체. 법적 평등(법의 목적은 자유).
 - 마키아벨리. 자치의 강조와 갈등의 인정. 이탈리아 도시공화정.⁵⁾
 - 해링턴, 몽케스키외, 루소 (시민혁명기)
 - 매디슨, 제퍼슨 (미국 자유주의적 공화주의)
 - 한나 아렌트: 고전적 공화주의의 부활

4) 최 유. 2004. "현대 공화주의 정치사상과 헌법," 法政論叢 제39권 제53집. p.27.

5) 혼합정체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시각에서는 베네치아에 주목.

○ 공화주의의 유형

- 국가의 목적과 형태에 따른 유형⁶⁾

	국가목적론으로서의 공화주의		국가형태론으로서의 공화주의
	개발공화주의	보호공화주의	반군주제
내용	직접참여의 본질적 가치, 참여와 심의의 덕의 연마, 공동체 형성과정에서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공공선 지향, 참여로서의 공적 자유	윤리적 국가목적으로서 공공선, 비지배 자유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 법률에 기반한 국가행위, 권력통제를 위한 혼합정, 공직사상, 공직윤리, 공선 정향으로서의 시민적 덕	국가는 군주제이거나 공화국이거나 둘 중 하나(마키아벨리), 세습되는 일인지배체제의 대립어로 사용
사상가	아리스토텔레스, 루소, 해링턴, 아렌트, 포콕	키케로, 마키아벨리, 몽테스키외, 매디슨, 칸트	이후 지속적 영향

- 신로마 공화주의와 고전적 공화주의⁷⁾

	신로마공화주의	고전적 공화주의(시민적 공화주의)
인간관	-상호의존적 -군집의 필연성은 거부(인간의 개인적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공동체가 필요. 본성은 필연적으로 사회적일 필요가 없다)	-상호의존적 -군집의 필연성과 자연성 부분적 인정(인간은 사회를 통해 개개인이 부여받은 본성을 실현한다. 이 본성은 사회적·공동체적)
정치 사회관	-참여: 자유 지키기 위한 수단 -정치참여: 개인의 이기심의 발현 (자신의 목소리를 내려는 것이 목적) -정치의 수단적 성격 강조	-참여: 자연성의 회복이자 필연적인 것. 참여 그 자체가 목적. -정치참여: 개인의 자기애의 발현 -정치의 수단적 성격보다 자기실현성 강조
시민적 덕성	-비지배적 조건에 대한 경험에 기초한 자유에 대한 애착 -정치적 산물이며, 심의를 통한 정치적 판단 요구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실체 -명백하고 자명하며, 전정치(pre-political) 의무.

6) 이계일. 2011. “공화국 원리의 함의에 대한 이념사적 고찰: 고전적 공화주의 이론의 유형화와 그 법적 구체화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法學研究』. p.92.

7) 박준혁. 2007. “키케로의 공화주의.” 『정치사상연구』 제13집 2호. p.138; 2008. “시민적 책임성: 고전적 공화주의와 시민성.” 『대한정치학회보』. 16집 2호. p.138의 표를 약간의 문구 수정과 함께 합친 것.

○ 특징⁸⁾

- 군주와 제후의 권력에 대한 반대와 회의
- 비지배적 자유⁹⁾와 상호성(신로마 공화주의)

	소극적 자유	비지배 자유	적극적 자유
자유 정의	간섭의 부재	지배의 부재	시민적 능력의 행사
자유 핵심	선택 행위	비지배 조건	자율

- 시민적 자유는 참여를 기본 요소로 하는 자치적 정치체계를 필요로 한다. 시민의 위대함은 시민들이 ‘자유로운 삶의 방식’에 참여하는데 달려 있음.
- 공공선과 시민덕성. 자유와 참여는 불가분의 관계, 정부의 일은 시민의 일.
- 공화주의적 애국심
- 법치와 혼합정체. 가장 효과적인 법률은 ‘공공선’을 간직하고 있는 시민들에 의해 만들어진 법. 주권적 권위는 인민에게 있으며, 정부는 인민의 의사를 실행하는 ‘위원회’로 인식되어야 함.

	자유주의	공화주의
인식론	-분리, 고립, 독립적 인간 -사회구성을 통해 안전 추구	-사회적, 상호의존적, 관계적 인간 -생존이 아닌 잘 사는 것, 행복 추구
정치사회적 관점	-시민권: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로운 법, 제도적 권리 - 정치참여:개인 권리를 지키기 위한 수단 - 시민권:인간의 불가침 권리가 제도화된 것 정치과정에서 정치적 평등으로 구체화	-시민성=정치권력 구성 과정에서 요구되고 형성되는 시민적 덕성 -정치참여: 자연성의 회복이자 필연적인 것 -시민권:정치과정을 통해 형성, 시민적 덕성으로 구체화
지구시민권 관점	-보편주의:문화적 차이와 상관없이 인간이 추구하는 바는 같다 -주관주의:최종판단은 개인에게 귀속. 모든 선택은 개인의 의사가 우선. -지구시민권 실현 가능	-특수주의:공동체별 문화적 차이 존재 -객관주의:인간은 공동체의 목적을 인지하고, 그것에 바탕해 정체성 가짐 -지구시민권은 특수한 맥락에서 형성된 시민적 덕성과 상충

8) 헬드가 ‘계발 공화주의’로 규정한 내용을 포함시킨 것이다. 데이비드 헬드(박찬표 역). 2010. 『민주주의의 모델들』. 후마니타스, p.504.

9) 박준혁. 2007. “키케로의 공화주의.” 『정치사상연구』 제13집 2호. p.136.

	자유주의	공화주의
문제점	-개인주의로 인한 개인화와 원자화 -개인에게 최종판단을 맡기는 주관주의로 부터 도덕적 상대주의적 경향성 -국가의 중립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반면, 개인의 사회적 권리의 보장과 증진에 인식	-인간에 대한 몰이해, 인간의 공공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로 개인의 자율성 침해 -전체적 선호의 사회공학적 강요 -객관주의로 인한 다양성의 침해와 극단적 형태의 전체주의화 경향성

※ 자유주의 공화주의 비교¹⁰⁾

2) 구상의 전제

○ 새로운 공화국 구상의 의미

- 장점의 계승과 다양한 유형의 창의적 융합을 통해 아래와 같은 항목들이 구현되는 정치체제의 수립 모색.

: 생존을 넘어선 행복의 추구

: 시민적 덕성의 함양과 발휘 (권리와 책임 의식의 조화 / 신념윤리와 책임윤리의 균형)

: 공적 자유의 구현 (비지배의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확보와 실현)

: 시민 참여를 통한 공공선의 구현과 공동체성의 복원

: 공동체성의 복원을 위한 상호의존성의 회복 (사회적 연대)

: 진정한 법치의 구현

: 자치의 실현

- 새로운 공화국 구상에 있어 가장 먼저 전제해야 할 것은 지금의 정치사회적 현실의 역사 단계적 특성에 대한 이해.

- 한국 역시 내전·(분단)국가형성·국가주도 산업화·(정치 제한적)민주화·(신자유주의적)세계화·(정치·사회경제적)사회양극화 등 근대 문명의 보편적 역사적 대변동을 다 겪은 이후의 시대에 놓여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 좁혀 보아도 현재의 정치·사회적 현실이 민주화 이후 35년에 걸쳐 만들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10) 박준혁. 2008. “시민적 책임성: 고전적 공화주의와 시민성.” 『대한정치학회보』, 16집 2호; 2007. “키케로의 공화주의.” 『정치사상연구』 제13집 2호, p.137의 표를 간략한 문구 등으로 수정한 것임.

- : 경제력과 군사력 세계 10위내 국가의 반열에 올라 있다는 것. 그 과정에서 수십여 년 시간의 흐름과 경험의 축적과 제도, 선호, 행위 양식 등이 이미 세팅 되어있다는 것(이 자리에 모인 대부분의 사람이 꿈도 꾸지 못했던 정치사회적 현실에 놓여 있는 것임. 각종 K담론, 선도국가론의 등장, 개혁 담론의 사라짐. 적폐청산 담론에 대한 거부감의 존재 등등).
- 이런 현실에서 새로운 공화국 구상의 방향은 세 가지. 리셋, 적응. 둘 사이의 어딘가(즉, 창조적 적응). 이 중에서 결국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창조적 적응.
 - 창조적 적응이라는 차원에서 새로운 공화국 건설을 논할 때의 가장 큰 문제는 모호함. 뭐가 창조이고, 어디까지가 리셋 혹은 적응의 경계인지 등등.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호함을 넘어서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 하지만 새로운 공화국을 구상한다고 할 때는 이미 그 모호함과 오랜 시간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 그리고 창조에 대한 정의와 경계의 설정에서 유연함과 시의적절함에 대한 중시를 의미.
 - 이를 전제로 본 발제는 새로운 공화국 구상을 위한 진보정치의 과제를 이념, 주체, 전략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함. 이때 정치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음(구상의 출발점).
 - : 민주화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치는 주로 ‘여의도 정치권’이라는 공간적·영역적 이미지로 형상화 되어있음. 정치학 논의도 주로 의회·선거·정당(특히 선거)에 치중되어있음. 새로운 공화국 구상을 위해서는 이를 넘나들 필요가 있음.
 - : 이때 정치(학)의 본질을 규정하는 물음, 즉 “(누가 당선되는가가 아닌) 누가 지배하는가(통치하는가)”를 복원할 필요가 있음. 새로운 공화국의 이념(목적)-주체-전략을 이 물음에 대한 답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 동시에 정치에 대한 재규정을 관통하는 물음이기 때문.
 - : 공적 갈등의 해소, 공감의 지대 창출, 공동체의 정치경제적 질서의 재생산 등과 같은 시각도 거부할 필요는 없음. 계급이익을 관찰하려는 계급투쟁적 관점에서의 규정도 마찬가지. (정치기업가로도 불리는) 엘리트의 실천이나 (의도적이지 않은 혹은 무결정적인) 다원적 주체들의 경합 과정과 그 결과로 보는 시각도 역시 마찬가지. 어떤 하나로 규정할 수 없는, 시공간적 맥락과 상황에 따라 모든 규정이 제각기 혹은 함께 적용될 수 있는 다층적이고 다면적인 복합적 현실에 살고 있기 때문. 또 정치가 공적·사적 삶의 영역 전반에 걸쳐 관계

지어져 있기 때문. 외교-국방과 같은 전통적 사안에서부터 경제는 물론, 최근 소확행 공약의 남발 현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일상 삶의 문제에까지.

: 다만 정치를 ‘올바름-혹은 올바른 원칙-의 구현’이라는 ‘단편적’ 차원에서 바라보고 규정하는 것은 피해야 함. 문제 해결력을 선보일 수가 없음. 정치의 복잡성과 다층성을 고려할 때도 그렇고, 생각과 처지가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 기초한 실천이기 때문. 즉, 약자보호라는 올바른을 구현하기 위한 실천에서도 상대방과 정도와 방식을 둘러싸고 -적어도 상대방을 무력으로 죽이지 않는다고 할 때- 후퇴 양보 타협 거래 변형 등의 ‘조정’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기 때문.

: 정치의 의미를 올바른의 구현에서 찾는다면 그것은 거짓과 위선에 다름 아님. 정치는 자신의 올바른(혹은 타인의 그릇됨)을 주장하거나 입증하기 위한 실천에 머물 수가 없음. 경쟁자는 물론,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해가는 과정에서 온갖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주지도 않음.

: 옳은 게 늘 맞는 게 아니라는 것에도 유의해야 함. 나쁜 이유로 옳은 일을 하기도 하고, 좋은 이유로 나쁜 일을 가져오기도 한 역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실천 세계로서의 정치(배역의 소화). 또 모든 선택이 문제를 가져오지만 그래도 선택을 해야 하는 딜레마 동반의 실천. 결국 정치적 올바름은 상대적일 뿐만 아니라 맥락적. 상대성과 맥락을 늘 잘 살펴야 함. 뭔가 문제를 좋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 이는 가치와 규범의 상대화라기보다는 (정의로움의 구현에 다름 아닌) ‘가치의 통일적 구현’이 그러한 상대성과 맥락의 포용과 이해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

3. 새로운 공화국을 향한 진보정치의 과제: 이념의 융합적 재구성과 서사의 창출

- 이념은 정치의 목적 방향 속도 전략을 이끔. 오늘의 희생을 내일의 희망으로 연결. 정보 지식 전달을 위한 간결한 언어이기도 하고,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체를 호명하고 그들 간에 연대의식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접착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념은 필요하고 구상의 핵심이 됨.

- 새로운 공화국 구상에 있어 이념(목적)은 (그 이름이 무엇이든 간에) ‘지배-피지배간 힘의 균형을 위한 사회적 약자의 교섭권력 보유와 신장’을 핵심으로 삼는다. 단지 노동3권 보장이나 인권 보장 제도의 도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또 투표권의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동 교육 건강 주거환경 등 기본권적 영역에서 정책결정권(주권)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과 역량의 구비, 즉 삶의 자산과 권력자원의 확보와 동원망 조직에 초점을 맞춘다(이때 약자는 여성, 노동, 빈민, 청년 그 자체가 아니라 교섭 권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개인과 집단을 가리킨다). (고립이 아닌)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지역공동체적 기반과 단위의 조성도 포함.
- 새로운 공화국 구상을 위한(통한) 이념을 모색함에 있어 유의해야 할 지점이 있다. (정상적이든 아니든) 역사적으로 자유주의·보수주의·사회주의 (추종 세력)의 성과와 오류와 한계를 모두 경험한 시대에 우리가 산다는 것. 이념 추종의 위험성에 대한 경험도 축적되어 있다는 것. 그런 가운데 이념에 친화적이지 않은 시대, 즉 ‘반(反)이념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
 - 반이념의 시대는 미래 세계에 대한 가치 지향적 목적의식과 의지를 삭제하고 체제 변혁 가능성을 봉쇄한다. 과거와 미래를 삭제한 변조된 시간 감각에 기대어 현재에만 살면서 실용이 지배적 규범이 되고, 물질적 실리와 이해타산이 주요 행동 규범이 된다. 희생 양보는 연대 협력 등은 어리석음 혹은 인간 본성에 걸맞지 않는다고 여기게 된다. 그것의 위대함과 숭고함을 깨칠 시간이 삭제되었기 때문. 또 그 시간 속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오늘을 살아야한다고 말할 때의 오늘의 의미인) ‘자기다운 오늘’을 빼앗겼기 때문.
 - 결국 반이념은 주체의 거세에 대한 허용을 의미한다(이념의 형성은 주체의 복원과 그것을 위한 각성 계기의 구비를 의미한다). 탈맥락적이고 파편적이고 단편적인 왜곡된 사실과 편향된 시각에 이끌린 의도적 무지와 감정과 혐오와 분노에 기댄 반지성주의 정치는 이와 같은 반이념적 환경이 강제한 것이기도 하다.
 - (사이비든 아니든) 보수든 진보든 정당 내에서도 이념 (담론) 형성 부위가 사실상 소멸. 이데올로그, 담론가, 이론가 등의 부재. 선거전문가 여론조사전문가 등이 자리를 대신함. 지식 사회의 붕괴. 특히 대학사회. 운동진영 내에서도 (집합적) 지적 실천 미약.

- 이를 감안할 때 상당 기간 과도적 전환기적 아이디어 등의 생성 경합 사멸 심화 확장의 모색의 시기를 거쳐야 한다.
- 이때 주목해야하는 것은 자유주의 + 보수주의 + 사회주의의 융합 가능성을 포함해, 이미 현실에서 제기되고 전개되고 있는 낯선 관점과 개념들임. 마을 만들기, 도시재생, 청년주거운동, 공유-커먼즈-운동 등과 같은 논의와 실천에 주목할 필요성. 새로운 사회운동적 주체가 형성 중이기 때문(이때 보다 급진적이고 변혁적인 이념의 모색이라는 것이 기존 이념들 중 보다 강하고 센 이념의 취사선택과 추종을 의미하는 것인지 살펴야 함).
- 물질주의적이고 몰개성적이고 계량화된 (경제적) 자유주의의 합리성과 과학성에 대한 보수주의의 비판과 인간의 오류 가능성에 대한 자각과 엘리트의 희생과 헌신의 정신의 강조, (정치적-사회적) 자유주의의 개체성 존중의 중시와 지배 권력에 대한 견제심과 과학기술적 진취성, 사회주의의 약탈적 사유경제 질서와 (반공화적) 엘리트주의(메리토크라시-특권획득층 지배체제: 가짜 엘리트 과두제)에 대한 비판과 공동체성과 연대 협력 평등에 기초한 자유의 실현에 대한 믿음 등을 융합하는 이념의 모색. 유의할 것은 장애물(비판 논리)보다 희망의 원리와 길을 드러내는 이념 구상이 보다 필요하다.
- 동시에 이념 형성의 환경, 대변동기 조성되고 있는 중(4차산업혁명, 기후위기, 우주개척 본격화 등등)임에 유의해야함. 따라서 '산업혁명 + 계몽주의(자유주의)-사회주의-민주주의 등과 같이 일련의 계몽주의 지식인 (계급) 집단과 네트워크의 형성 + 매체의 발전에 따른 사상 이념의 전파 (공간의 형성) + 역사적 전환 국면과 사건의 발생 (정치혁명)'과 같은 식의 형성 조건과 경로와 방식이 지금 시대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파악이 필요함. 즉 근·현대 문명의 열었던 이념 형성의 조건에 상응하는 '현재적 특수태'가 존재하는가에 대해 살펴야 함. SNS? Youtube? 블로거-유튜버-인플루언서(가상모델)?
- 한편 이념 형성의 과정과 방식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지점이 있다. 지워진 자들과 그들의 삶을 주인공으로 하는 서사-이야기의 창출이 필요하다는 것.
- 서사의 창출은 이념의 가시적 형상화(비전의 구체화)를 위한 기초 작업이기도 함. 이야기가 있어야 시각화가 가능하고, 이야기가 있어야 이미지가 (해석된 시선을 작동시키는) 의미를 획득할 수 있기에.

- 서사의 창출은 정치(인)의 역할을 새로운 주인공을 찾고 이야기를 만들어 들려주는 것에서 찾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함. 주체형성의 서사 발굴이라는 점에서 ‘정치의 인문화’ 전략이라고나 할까(노회찬의 6411 연설 / 노회찬 6411 정신).
- 고통스러운 삶의 교훈과 지혜를 이념화하기, 즉 민중의 실제 희로애락을 담은 서사를 통해 이념적 가치와 (행동)규범 전략 등을 추출해보자는 것. 미담 만들기가 아니라 <올리버 트위스트>... <나, 다니엘 블레이크> <미안해 리키> 등등의 콘텐츠, 즉 문학적·미학적 형상물을 통해 공화를 훼손하는 현실과 그것의 극복을 위한 새로운 이념(혹은 공화의 복원)의 필요성이 (자기 스스로) 드러나게 하자는 것임.
- 이는 주체의 형성은 텍스트화된 이념의 학습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기반해 자기 스스로 이념의 형성자일 수 있음을 승인하고 자각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기초. 또한 세대 젠더 등이 (주로 피고용자와 소비 그리고 선거에서의 캐스팅보트역에 한정된) 주체로 호명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또 각종 갑질 논란이 지속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자신이 어떻게 대우받고 있는지가 주체됨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이다. 또한 서사(이야기)의 창출은 맥락을 이해시키는 실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4. 새로운 공화국을 향한 진보정치의 과제: 주체 형성을 위한 연대·정책 ‘유인’ 역량의 강화

- 정치주체의 형성은 크게 세 가지 유인을 통해 이루어짐
 - 연대(solidarity) 유인의 제공
 - 정책(policy) 유인의 제공
 - 물질(material) 유인의 제공
- 진보정치세력은 물질 유인 제공 역량이 취약. 이 때문에 애초에 정치참여 및 활동의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개인(명망가)과 집단(정파)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를 넘어서서 사회적

약자들이 정치 주체로 나설 수 있을 때 새로운 공화국을 향한 행보를 시작하고 지속할 수 있음.

○ 진보정치세력이 제공할 수 있는 유인은 연대와 정책 유인. 현재 제한적이거나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연대와 정책 유인을 강화하고 활용하는 데 투여해야만 함.

- 새로운 공화국 관련한 이념 형성과 서사 창출이 연대와 정책 유인의 핵심.

- 원내진출에 바탕한 제도화(조직의 지속성 등)는 분명 진보정치세력이 이룬 성과. 그러나 제도정치세력이지만 군소정치세력으로 고착된 작금의 상황에서 새로운 공화국의 구상을 실천하고 그것을 위한 정치적 주체의 형성을 위해서는 원외-비제도-지역사회 공간에 초점을 맞춰야 함.

: 중앙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 정치에서 사회로

: 제도 내 비주류엘리트 중심에서 정치 밖 대중(엘리트) 중심으로

- 정당조직 자체가 교섭 권력과 자원을 보유하지 못한 사회적 약자들이 학습과 실천 기회를 제공받는 정치적 생활공동체(공화 구현의 장)가 되어야 함.

- 사회적 약자들이 자기 삶의 문제를 공적 문제로 접근하고 다루면서 의제-담론-정책을 생성·유통할 수 있어야 함.

- 일상적 만남과 소통이 가능한 문화적 장소(pub)와 협력적 관계 맺음의 공간(co-working space) 창출도 필요함.

- 중앙조직은 이를 지원하는 데에 집중해야 함.

: 정치대학과 정책 상담 기구와 인력 등의 상설적 운용과 배치

: 사회적 약자층 자녀들을 위한 중·고등 교육 과정의 운용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정치 밖의 지적 자원(연구-교육 역량)의 재결집 필요

- 정치학교와 시민교양아카데미와의 연계 확보 필요

○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음. 주체를 여성, 노동, 세대, 지역 등으로 구체화 발굴 육성

한다는 접근에 유의해야 함.

- 주체 형성은 분야별 전공 학생을 선발해 육성하는 식이어서는 안됨. 특화된 역량을 보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치는 기본적으로 문제들의 연관·연계·연결에 주목하고 전체와 부분, 국가와 국가, 중앙과 지역 등의 사다리를 건너고 오르고 내리면서 해법을 찾는 종합적 실천.
- 이를 감안할 때 다양한 주체 위치와 경험에 기초한, 즉 사회적 균열의 중첩 지대에서 주체를 찾아야 함. 가령 여성 문제를 여성에 국한시켜 보는 게 아니라, 그 여성의 삶에 고통을 부과하는 노동-세대-지역에 대한 교차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주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

○ 의식적으로 정치가 훈련이 필요한 실천이라는 것을 상기하는 게 필요.

- 즉, 정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실천은 아니라는 것’을 유념하는 게 필요. 정치는 사회경제적 재화와 지식 및 네트워크 자원의 보유와 동원 역량을 갖춘 이가 할 수 있는 실천임.
- 또 갈등의 현장에서 이견과 반목과 대립을 조정하고 해소하는 경험을 마다하지 않고 축적한 이의 실천임. 그러한 역량과 경험을 보유한 이가 바로 정치엘리트. 정치는 그러한 엘리트들의 실천.

5. 새로운 공화국을 향한 진보정치의 과제: 제도 변경 요구에서 동맹과 제휴의 구사로

- 이념은 주체의 전략적 실천 프로그램의 구비와 실행으로 작동. 전략적 실천은 정치의 존재 의의를 드러내는 실천의 정수.
- 지금까지 진보정치 세력의 주된 전략적 기초는 (독자적) 진보정당 (원내 진출 및 위상 강화) 노선이었음. 민주화 이후 혹은 진보정치세력의 원내정당 시대를 연 민주노동당 이후 20여년에 걸쳐 성장 지체 혹은 한계. 대체로 3% 지지에 갇힘. 대체로 정당체제 내에서 실

효정당(relevant party)의 위상 역할을 갖지 못함.

-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양당 지배체제의 제약에 초점을 맞춰 선거제도 변경(전체 의석 중 비례의석 확대를 통한 득표율과 의석점유율의 비례성 확대를 목적으로 함)을 통해 다당체제로의 전환에 힘입어 위상 역할 강화하고자 함. 2004년 총선에서 성과를 거둠. 그러나 이후 점차 효력 약화. 선거제도가 진보정치세력의 성장을 담보하는 게 아님을 확인함.
 - 2016-2017 촛불집회·탄핵정국 이후 19대 대선을 통해 '보수정당 분화'에 기대어 다당체로의 전환 기대감 상승. 그러나 선거제도 변경에도 불구하고 위성정당 사태 등을 겪으며 21대 총선을 전후로 다시 양당지배체제로 귀결.
 - 민주화 이후 반복해 나타난 현상. 반복을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됨. 전략적 대응 양식이 이미 양당 지배체제 수렴 차원으로 모델링되어있음을 의미하기 때문. 위성정당 사태도 그러한 선상에서 일어난 일. 어떤 선거제도로 변경하든 간에 양당 지배체제에 조응하는 방식으로 조작해낼 수 있다는 것임. 민주화 이후 한국정치는 그럴만한 충분한 시간을 보내왔음.
- 이를 감안할 때 선거제도와 다당체로의 전환 전략이 유효한지에 대해 물음을 던져야 함.
- 이 전략은 기본적으로 정치를 '선거게임'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수용한 것. 결국 양당 지배체제의 규칙에 순응하는 것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음.
 - 보다 직접적 문제는 대중적 관심과 지지를 얻을 수 없다는 것(2002년과 같은 대중적 지지에 기대어 선거제도 변경은 어떻게 가능했나? 사회운동적 에너지의 총동원에 따른 것이었음. 이것이 지금, 앞으로 가능한가?).
- 정치에서 전략의 핵심(정치력 신장과 강화의 역량)은 '연합의 형성과 파기'임. 이를 통해서만 실효정당의 위상과 역할을 보유하고 수행할 수 있음.
- 언제 누구와 손을 잡거나 놓을 것인가?
 - 명분과 실리의 딜레마를 무엇을 기준으로 해소할 것인가?
 - 얼마큼의 어떤 손해를 감수할 것인가?
 - 이를 신속히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부위'의 구성과 운영 필수 (상황실·전략실)

- 특히 한국의 진보정치세력과 같은 군소정당의 전략은 크게 세 가지
 - marginal
 - : 상대적으로 이념적 거리가 가까운 큰 정당 주변에 위치. 독일 사민당-녹색당. 한국 진보정치세력도 원내진출 이후 대부분의 시기 동안 구사.
 - hinge
 - : 양대 정당 사이에 위치해 캐스팅보트 역할을 수행. ‘데스노트’ 역할 등으로 나타난 바 있음. 고도의 정치력과 유연성 요구. 정당조직의 응집성이 높아야 하고 리더십에 대한 신뢰가 높게 형성되어 있어야 함.
 - detach
 - : 기성 정치세력에 대해 거리를 두고 비판을 통해 존재감 획득. 원내진출 이전 진보정치세력이 주로 구사했던 전략. 극우(군소)정당의 등장기 전략이기도 함.
- 한국에서 진보정치세력의 위상 강화는 역설적으로 ‘연합정치’ 전략의 구사 때 이루어졌음을 상기할 필요.
 - 17대 국회 20% 육박하는 역대 최고 지지율(한나라당과의 공조), 민주당과의 연합공천과 18대 총선에서의 역대 최대 의석(13석) 확보. 20대 국회 공동원내교섭단체 구성을 통한 관심 조성 등.
 - 이때 유의할 것은 민주당과의 연합만을 통해 얻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 하지만 대체로 연합 전략은 ‘역사적 동질성-이념적(정책적) 이질성’ 간의 딜레마에 있어 전자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 역시 인정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 즉, 역사적 동질성의 힘이 더 크다는 것을 수용해야 할 문제.
- 제도변경 전략의 대안 혹은 보완 전략으로 사회운동적 방식을 통한 의제투입 전략을 구사.
 - 2000년대 초 일정하게 성과를 거둠. 하지만 현재는 새로운 투입의제를 생성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양당에 흡수되어 의제의 고유성이 희박한 상태. 기후위기 등의 의제에서조차

입지를 마련하지 못함. 그런 중에 젠더-운동권 이미지에 갇혀 있음.

- 문제는 노동약자층과 연계되지 못한 채, 또 이들에게서 새로운 정치주체를 형성하려는 노력도 각별히 이루어지지 못한 채 신세대 비주류 운동엘리트 영입에 의존하는 경향이 심하다는 것.

- 이때 심각한 문제는 전략적 접근을 봉쇄하는 방향으로 몰려갔다는 것.

: 정치 전략의 핵심이 연합정치에 있으며, 연합형성-과기의 힘을 보유 발휘함으로써 실효정당이 될 수 있다는 것, 연합 형성-과기를 통한 실효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적정한 지지율과 의제-정책을 유지 확보하고 있어야 하고, 그에 바탕해 적절한 바게닝 셋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얻을 것과 내줄 것에 대한 분별), 의제 투입 전략 구사 시 우선 순위 및 타이밍의 설정과 의제 간의 연계 구상이 중요하다는 것 등에 대한 인식과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실천이 미약.

: 사회운동적 방식을 통한 의제투입 전략마저도 도덕적 명분을 앞세운 피케팅과 샤우팅 등의 각종 퍼포먼스 등에 국한된 '착한 사람 코스프레'가 되고 마는 이유. 급진적 정치든 아니든 문제해결 역량의 발휘를 통해 지지를 얻어내고, 그것에 바탕해 이념과 정책을 구현할 힘을 얻는다는 정치의 기본적 원리를 놓치고 있음.

: 전략 입안과 그것을 위한 정세분석 단위의 취약함, 이와 연계된 전당적 차원에서의 전략적 담론 생성-유통 실천의 미약함에서 확인 가능.

○ 한편에서는 선거제도변경에 의존하는 것에서 탈피해 진보정치세력의 전략적 역량 강화를 위한 실천을 꾸준히 진행해가야 함.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새로운 실험도 필요.

- 진보정당 실험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던 사회세력화, 특히 지역정치 활성화 등을 본격 시도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이념추종 경향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생활영역에서 정치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정운영 역량 구비를 위한 지자체 운영의 경험을 축적해야 함.

: 여기에 자원을 보다 집중 투입해야 함.

: 이념 정책의 구체화 실물화, 새로운 주체의 발굴과 양성 등도 이 과정에서 보다 활성화

- 수 있음. (사회적) 경제-노동-기후위기 등의 전환의제의 투입과 정책적 산출도 훨씬 효과적일 수 있음. (특정) 진보정당의 울타리를 넘나드는 민생정치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으며, 전략적 제휴 관계 형성의 기반을 마련할 수도 있기에.
- 이는 양당지배체제를 유지 재생산하는 ‘중양’ 중심의 정치와 양극화된 공론장의 영향력에서 거리와 자율성을 확보하는 공간의 마련과 장소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임. 따라서 제도변경 전략도 ‘지역정당’ 허용 등에도 주목하는 것으로 다각화할 필요가 있음. 이때 분권과 자치 의제가 여전히 잠복하고 있는 상황을 활용해야 함.
 - 전략지역과 의제정책 등의 선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이를 수행할 단위의 구성을 제기해야 함. 진보정당의 재구성도 이와 같은 ‘지역정당 간 연합 모형’에 입각해 구상해 볼 수 있을 것임.
 - 단 이 모형에서 유의할 것은 기본적으로 수직 하방일 수밖에 없는 유인 제공의 리더십이 작동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 이를 해결할 별도의 구상이 필요할 것임. 전국-중앙 단위에서는 지역 간에 동의한 ‘공통의제와 정책’을 중심으로 기능하는 이슈정당 모형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음.
- 어떤 사회집단들의 동맹과 제휴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도 중요. 정치적 동맹과 제휴 등 연합정치의 근본적 이유가 여기에 있음.
- 가령 ‘그린뉴딜’은 어떤 사회집단들 간의 동맹과 제휴를 염두에 둔 것이었을까?
 - 논란이 일기도 했던 서민복지동맹(민들레 동맹)은?
- ** 정치는 ‘호명의 실천’이기도 함. 즉 대표하고자 하는 사회집단을 구체적으로 호명해야 함. ‘정의로운 사람들’ ‘만민 복지’와 같은 호명은 호명이 아님. 이념과 정책을 통해 정확히 어떤 이들을 지켜내고 주체로 세울 것인지를 보여주어야 함, 또 실제 그리 하고 있음을 인정 받아야 함. 즉, ‘새로운 공화국’의 구상이 어떤 사회집단들에 (우선) 기초할 것인가가 명확히 설정되어야 함. 이념의 재구성과 서사의 창출도, 주체의 형성을 위한 유인의 강화도, 동맹과 제휴의 전략도 그러한 선상에서 수행되어야 함. 이때 진보정치 세력은 사회적 약자 (특히 노회찬 의원이 ‘6411 버스’를 통해 호명했던 계급 이하의 계급)에 주목해야 함. 즉 양대 정치세력이 민주화 이후 지역균열에 기초해 (넓은 혹은 사이비 보수-진보) 이념과 세대와 젠더 균열을 갈등으로 동원해 (상대적) 다수를 점하고자 했다면, 진보정치세력은 기

본적으로 계급 균열(사회경제적 균열)에 기초해 지역·이념·세대·젠더 등의 균열을 갈등으로 동원해야 함. 계급 균열을 (의도적으로) 삭제해온 것이 민주화 이후 최근까지 목도하는 한국 정치의 현실이고, 그것이 결국 '노동 없는 민주주의'로 불리는 반(反)공화적 질서의 동인이기 때문. 또한 계급 균열에 기초할 때 다수 획득의 침로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

주제 발표

대전환의 시대,
새로운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제안

김진석

주제발표

대전환의 시대, 새로운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제안¹¹⁾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

들어가며

나쁘지 않은데 이상하다. 한국사회의 얘기이다. 밖에서는 한국 사회를 시샘어린 경계의 시선을 보내거나, 부러워하는 의견이 차고 넘치는데, 정작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은 불행하다. 최소한 수치들이 보여주는 상황은 그렇다. 1인당 GDP가 3만 달러를 넘었고, 전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전체 경제 규모를 보더라도 세계 10위 이내에 드는 규모다. 이름을 대면 알만한 세계 주요 국가의 MBA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졸업 후 희망 직장 명단에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포함되기 시작한 것은 이미 오래 전 일이다. 경제와 먹고 사는 문제뿐만이 아니다. 5.18 광주민중항쟁, 6월 민주항쟁, 탄핵 촛불항쟁 등 세계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을만한 정치사적 사건들을 우리는 일제 강점기 이후에만해도 이미 여러 차례 경험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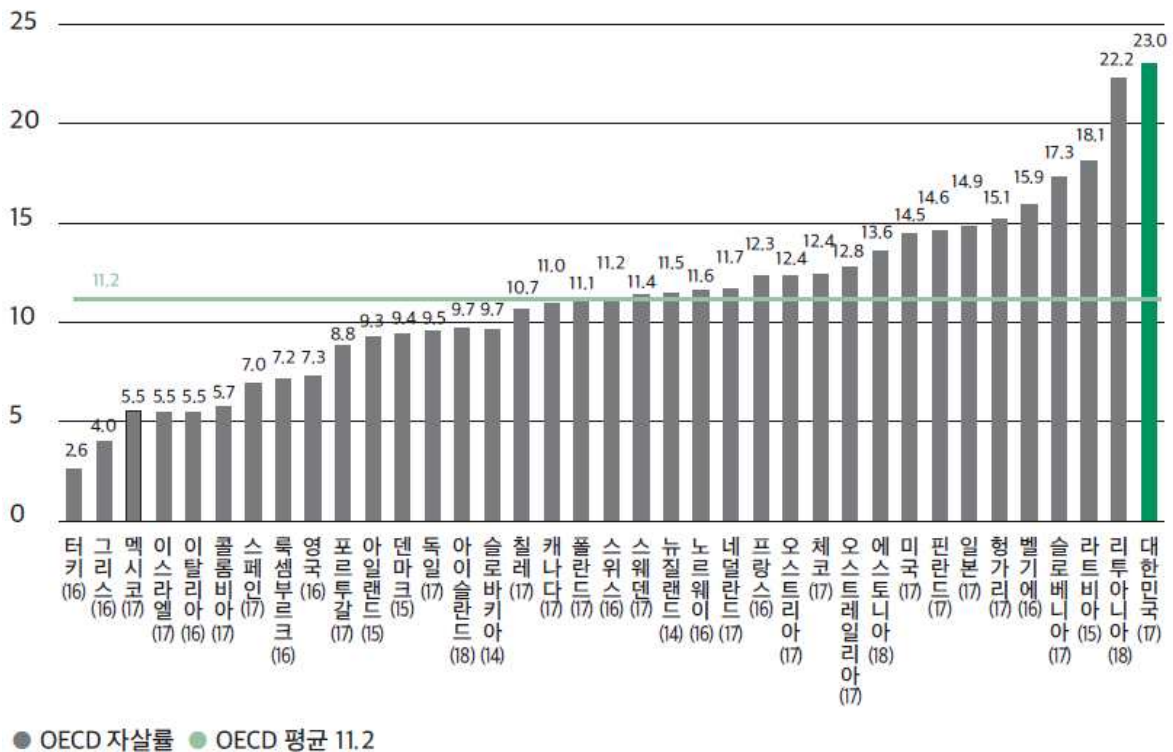
정치와 경제와 같이 딱딱한 영역만 그런 것이 아니다. 최근 세계적인 피아노 콩쿠르에서 압도적인 호응을 받으며 1등을 차지한 18세 피아니스트의 경우와 같은 고전음악 뿐만 아니라 대중음악, 영화, 발레, 축구, 야구, 배구, 피겨스케이팅, 심지어 비보잉과 같은 비주류 문화에 이르기까지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 문화자본의 사례는 그 목록을 얼마든지 늘릴 수 있을 정도이다.

언론에 대서특필된 바와 같이 UNCTAD가 굳이 나서서 기구 설립 이래 최초로 한국을 개발도상국 지위에서 선진국으로 지위를 바꾸는 결정을 해야 할만큼 한국의 외형은 나쁘지 않다. 2022년 한국은 40년 가까이 지속된 일제 강점기와 해방 이후 바로 이어진 분단과 전쟁의 10년의 역사를 지난 100년 남짓한 시간 동안 경험했다고는 믿어지지 않을만큼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초고속 발전을 만들어낸 국가이다. 사실 상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개발원조 ODA를 받던 나라들 가운데 OECD에 가입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개발원조의 공여국이 된

11) 이 글은 필자가 공동저자로 참여한 “이태수 등, 2022. 성공한 나라, 불안한 시민. 헤이박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토론회에 맞게 재구성한 것임을 밝힙니다.

유일한 국가이기도 하다. 실제 1960년 불과 \$156이던 1인당 GDP는 2019년 현재 무려 200배가 넘는 \$31,250에 이르렀고, 전체 경제 규모로 따지만 1953년 \$13억이던 것이 2018년이 되면 무려 1,000배가 넘는 \$1.6조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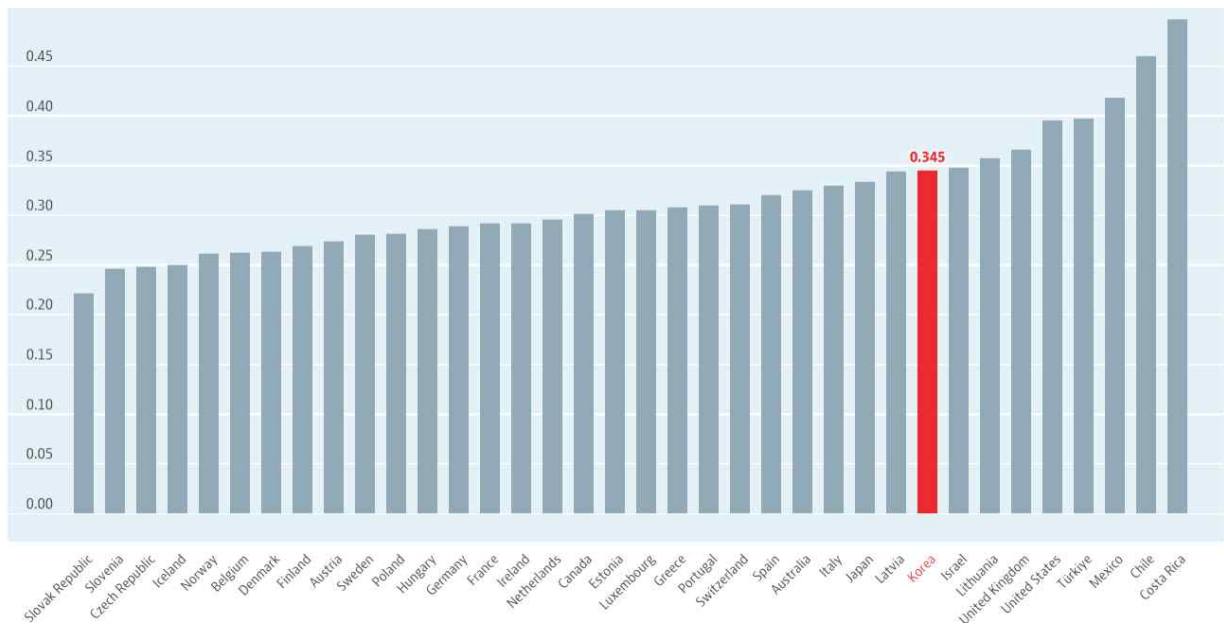
하지만 나쁜 신호가 공존한다. 앞서 언급한 이 많은 좋은 신호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의 거주민들은 불행하다. 2020년 세계 행복도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조사 참여국 153개 국가들 가운데 61번째에 해당하고, 지난 10년간 지수의 변화 정도를 보면 그 순위가 더 하락하여 105위에 이른다. OECD국가들 가운데 자살률 1위, 지난 30년 동안 자살률이 OECD 평균 26% 줄어든 반면 우리 사회는 같은 기간 동안 154%만큼 늘어났다는 통계치들은 절망적이기까지 하다. 삶의 만족도 역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점 만점에 5.5-6.3점 수준으로 매년 OECD 평균 이하의 값을 보이고 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국가에 사는 주민들은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행하다고 느끼고, 일부는 스스로 세상을 등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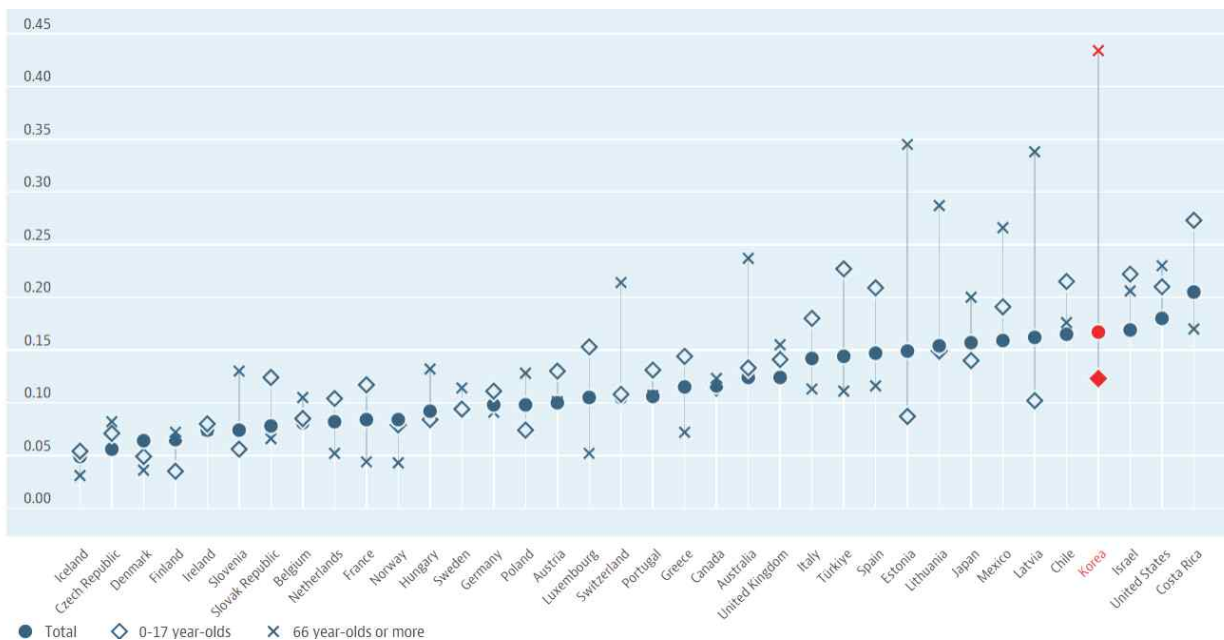
* OECD국가 자살률 분포(출처: 이태수, 김진석 등(2022). 성공한 나라, 불안한 시민.)

왜 그런 것일까? 우선 갈수록 심화되는 불평등에서 그 단초를 찾을 수 있다. 지니계수로 살펴본 우리나라의 불평등 정도는 OECD국가들 가운데 9번째로 심각한 수준이다. 소득 상위 20%가 전체 소득의 71.5%를 가져가는 반면 하위 20%는 전체의 1.4%만을 가져간다. 심각한

수준의 불평등이다. 심각한 수준의 불평등은 놀라운 경제 성장과 규모에도 불구하고 만연한 빈곤의 문제로 현상한다. 특히 노인 빈곤율의 경우 2006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2020년 처음으로 40% 이하인 38.9%를 기록했으나, 여전히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2위와도 상당한 격차가 있는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아동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다행이지만 이 또한 우리 사회 동질혼 현상과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결혼과 출산 기회의 격차를 보여주는 것으로 또 다른 차원의 불평등을 보여주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다시 역사상 유일하게 20년 가까이 출산율 1.3을 넘기지 못하고 있는 초저출생 국가 대한민국의 현실로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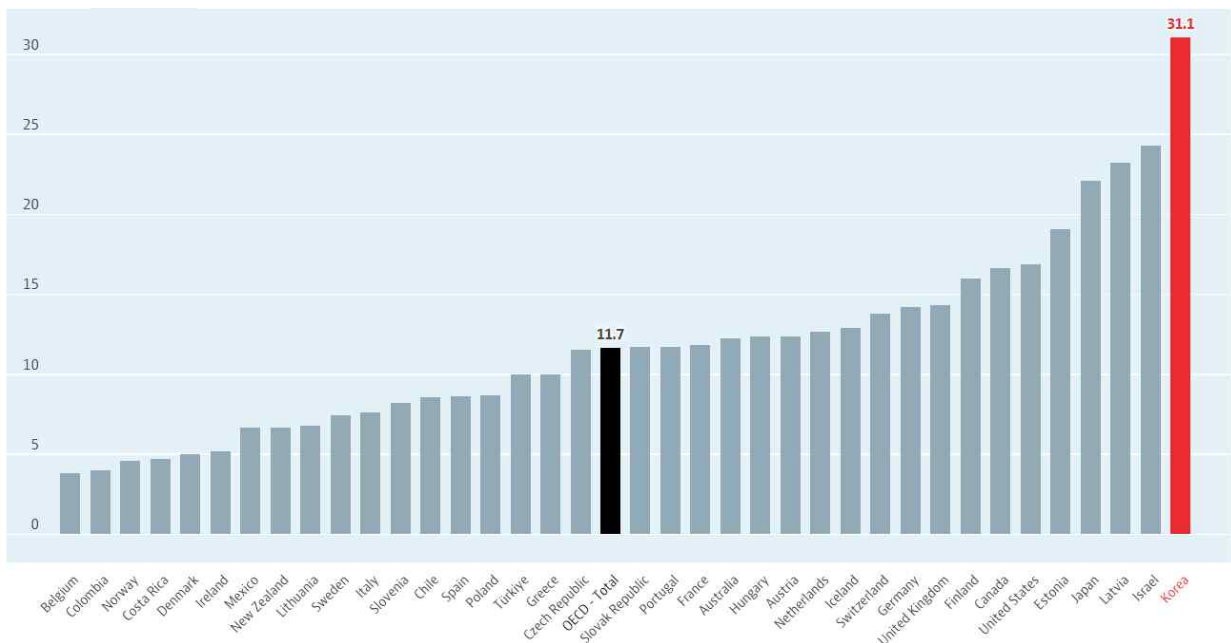
* OECD 국가 지니계수 분포(출처: OECD (2022))



* OECD 국가 빈곤율 분포(출처: OECD (2022))

불평등은 세습되고 구조화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넘어서기 어려운 격차와 단절로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2017년 서울시의 강남, 서초, 노원, 송파, 양천 등 5개 교육특구 출신이 서울시내 일반고 출신 서울대 합격자의 60% 가까이를 차지한다. 이 수치는 10년 전에 비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2020년 서울대 로스쿨 합격자 10명 중 9명은 소위 SKY 출신이다. 어느 지역, 어느 부모에게서 태어났는지에 따라 어떤 이들에게는 이미 많은 가능성이 지워진 채 출발선에 서야 한다.

계급간 격차 뿐만 아니라 성별간 격차는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성별간 임금격차는 OECD 평균의 세 배 가까이 이르는 수준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한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20년 현재 우리나라의 성별격차지수는 전체 153개 조사국 가운데 108위에 해당한다. 유엔개발계획UNDP이 보건, 교육, 노동시장 진출 등 인적자원 중심의 지표에 기반하여 평가한 결과 전체 189개 나라들 가운데 성별격차가 11위 수준이었음에도 최종적으로 임금과 사회적 지위 등의 측면을 고려하면 100위 바깥으로 밀려난다는 사실은 그 심각성을 더해 준다.



* OECD 국가 성별간 임금격차 분포(출처: OECD (2022))

극복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구조화된 불평등과 격차, 차별 구조 아래서 주민들은 때론 절망하고, 때론 분노한다. 특히 시작부터 불평등 구조를 상수로 놓고 출발해야 하는 청년들의 불안과 절망, 분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때로는 왜곡된 형태로 분출된다.

대전환의 요소들

불평등, 격차 등 이미 존재하는 위험요소들 외에도 우리 사회는 새로운 전환의 시대를 관통하고 있다. 우리 세대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이자 기회인 디지털 전환과 기후 전환, 그리고 인구와 가족구조의 전환이 그것이다.

우선 디지털화의 진전은 현대사회 산업구조와 고용, 삶의 방식에 이르기까지 심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2045년이 되면 AI의 지적 능력이 인류 전체를 합한 수준보다도 높아지는 이른바 특이점(singularity)에 이른다는 공상과학적인 예측이 아니라도 디지털화와 AI의 영향력은 전방위적이다. 무엇보다도 일자리와 업종의 변화에 대한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20년 내 미국 700여개 직업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디지털 기술에 의한 자동화와 로봇화 등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같이 디지털 기술에 의해 대체되는 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서서히 일자리를 잃어갈 것이다. 당연하게도 디지털 기술의 영역에서 새로운 일자리와 직종이 창출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이 규모와 구체적인 모형은 여전히 모호하다. 다만 소멸되는 일자리가 서비스직, 도소매업, 사무 보조 등 숙련 정도가 낮거나 소득 수준이 낮은 영역에 집중되고, 남아있는 일자리조차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플랫폼 노동이나 각 경제 영역의 노동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면 새롭게 창출될 일자리는 오히려 전문적이고 고부가가치적인 업무에 집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점을 고려하면, 디지털화에 의한 업종과 일자리의 전환은 결과적으로 기존 불안정, 불완전 고용에 기반한 노동자들의 피해함이 가중되는 방식으로 격차와 불평등의 심화로 이어질 우려가 큰 형편이다.

고용 뿐만 아니라 산업의 측면에서도 디지털 기술의 진보는 자본주의 생산체제와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간의 노동과 숙련에 기대어 수익을 창출하고 규모를 확장해온 자본들이 이제는 지식자본주의와 플랫폼자본주의로 전환할 것이 예견되는 상황이다. 산업구조와 자본주의 체제의 이와 같은 근본적인 변화는 기존 산업구조와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경험해온 우리 사회에 심각한 수준의 위험요소이자 기회로 작동한다. 요동치는 국제질서 내에서 우리 사회가 디지털 전환의 시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통과할 것이냐, 아니면 불평등과 격차의 문제가 건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심화될 것이냐의 기로에 서있다고 할 수 있다.

기후위기와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탄소배출 규제와 대안에너지로의 전환은 또 다른 차원의 근본적인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급격한 증가와 이에 따른 기온 및 해수면 상승의 전망, 그리고 그에 따른 대형 산불과 기상 재난 등 자연재해의 문제와 최근 경험하고 있는 팬데믹의 문제 등은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익히 들은 바와 같다.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지점에 이르렀다는 비관적인 전망조차 나오는 판에 지구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즉각적인 대응이 전지구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일이다. 기후전환을 예고하고 있다고 소개하기엔 세계 곳곳에서 이와 관련한 전환이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다. 심지어 현재의 연대기적 시점을 인류세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탈탄소시대로의 전환이라는 전사회적, 전지구적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 이와 같은 전환의 과제는 석유와 석탄 등 탄소연료에 기반한 에너지 생산을 바람, 태양 등 대안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제부터 시작하여, 화석연료 기반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전환하는 등 운송 기기의 전환, 그리고 산업체계 전반에 걸쳐 탈탄소를 실현하기 위한 신기술로의 전환 등 광범위한 차원의 과제를 우리 시대에 부여하고 있다.

전지구적인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은 다른 측면에서 심대한 전인류적 과제를 제기한다. 탈탄소인류로의 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용과 피해를 누적된 기후위기의 주범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개발국가와 해당 국가의 인민들이 과잉 부담하는 문제, 소위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의 문제이다. 대표적인 예로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탄소세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자칫 탄소세의 도입이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주요 기술을 선점하고 있는 선진국들이 탄소산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저개발국가를 대상으로 사다리 건너차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전지구적 차원에서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을 고려한다면 선진국들이 저개발국 가들에 탈탄소 기술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정의로운 전환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의로운 전환의 과제는 일국적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탈탄소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산업구조의 변환은 불가피하며, 이와 같은 산업구조의 변환은 다시 불가피하게 고용의 대전환을 초래한다. 예를 들어 고탄소 분야 산업 분야의 노동자들과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들에 피해가 집중될 것이 자명한데 이들의 피해를 전사회적으로 나누기 위한 전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탈탄소산업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실업과 전업의 위기에 놓인 기존의 노동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훈련과 재교육을 통한 전업 및 재고용 보장 등의 사회적, 정책적 과제가 놓여있는 셈이다.

인구구조와 가족구조의 급격한 변화 또한 특히 우리 사회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전환의 과제를 제기한다. 우리 사회는 2017년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2026년이면 전체 노인의 비율이 20%에 이르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의 노령화 정도가 여전히 일본이나 서구 유럽 국가들에 비해 덜 심각한 수준이지만, 고령화의 속도의 측면에서는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심각한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는 초저출산율의 문제와 더불어, 어느 사회도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의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구구조의 측면에서 초 저출산의 지속과 초고속 고령화가 있다면 가족구조의 측면에서 1인 가구의 비율 증가와 지속되고 있는 맞벌이부부의 비율이 있다. 1인 가구의 비율이 높은 현상이나 맞벌이가구의 비율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이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기존 복지국가의 형성 및 유지의 측면에서 주요한 환경적 요인으로 작용하던 가족내 특히 여성에 의해 전담되는 사적영역에서의 돌봄 구조가 더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또한 우리 사회와 같이 사적 영역에서의 돌봄을 대체하기 위한 사회적 돌봄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는 경우 돌봄의 진공 상태를 경험할 위험에 직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새로운 복지국가의 요소들

불평등과 격차와 같이 기존의 사회적 위기와 새로운 전환의 과제를 제기하는 디지털화, 기후위기, 인구구조와 가족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같은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복지국가는 몇 가지 주요한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첫째, 국가의 귀환, 즉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계대전과 공황 등 전 지구를 휩쓰는 위기에 대한 사회체제적 대응의 측면에서 제기되고 전성기를 맞은 바 있는 서구 복지국가는 1970년대 세계 자본주의를 강타한 석유파동과 이후 이어진 신자유주의의 전 세계적 확산과 더불어 작은 정부, 즉 작은 복지국가의 길로 접어든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구 중심의 주요 복지국가들과 상이한 경로를 거치면서 발전해왔지만, 특히 1990년대 말 외환 위기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민영화와 정부기능 축소, 각종 규제완화로 특징지어지는 신자유주의 적인 국가운영방식을 차용한 바 있다.

정부가 사회정책 지원에 활용하는 예산의 규모SOCX를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 우리나라 복지국가의 규모는 독일, 스웨덴 등 복지국가들이나 주요 OECD 국가들에 비해서도 대략 40-

50년 가까이 뒤쳐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들이 지속적인 사회보장영역 지출 증가에 힘입어 2020년 GDP의 14% 수준까지 상승하기는 했으나 2018년 공식 통계를 보더라도 여전히 OECD 평균 사회지출의 절반 수준인 10%대에 머무르고 있다.

세계에 유례가 없는 속도로 진행된 경제규모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주요국가들 가운데 압도적인 수준의 1위를 보이고 있는 노인 빈곤률 등의 사회문제를 고려했을 때 공적영역에서 소득보장, 사회서비스, 고용지원서비스, 보건의료 등 사회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는 국가의 귀환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한 사회지출의 규모를 최소한 OECD 국가 평균 수준에 이를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즉 큰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경로를 선택해야 한다.

둘째, 새로운 것은 없는 주장이지만 복지국가의 보편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전면적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의 도입을 계기로 우리 사회 복지제도의 보편주의 담론이 활발하게 논의된 데 비해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등 우리 사회 복지국가 주요 정책과 제도들의 경우 보편성이 현저히 부족하고 여전히 선별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공공부조나 사회서비스 등 영역에서 부양의무제가 여전히 존치되고 있는 점, 그리고 사회보험의 경우 고용상의 지위나 성별 등에 따라 가입율에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 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도 설계에 있어서의 선별성 뿐만 아니라 제도 운용의 과정에서도 선별성이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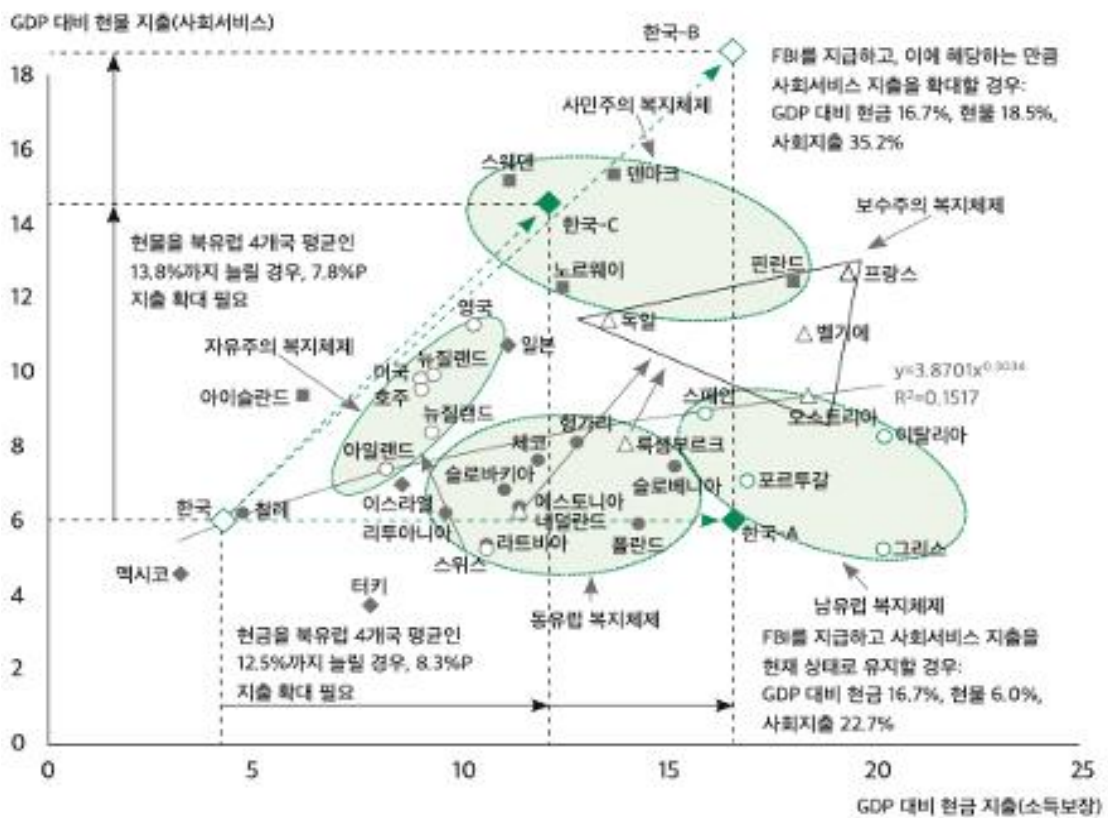
이 문제는 특히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그 중요성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뒤를 이은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후보시 공약과 당선 후 국정과제, 경제정책 운영계획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선별주의에 입각한 복지제도의 운용을 매우 선명하면서도 공공연하게 천명 하고 있다. 우리 사회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정치적, 제도적 기반이 매우 취약함을 보여주는 현상 이다. 보편적 복지국가가 전면적 무상복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제도의 성격에 따라 적정 수준의 급여를 모든 주민에게 적용하는 것이 핵심적 고려사항이다. 이용자와 수혜자의 지불 능력에 따라 차등화된 분담의 원칙은 얼마든지 유연하게 운영이 가능하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교육, 의료, 주거, 노후소득보장, 돌봄 및 일상생활지원, 고용지원과 같은 사회권적 차원에서 최소한의 시민적 권리라고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적정수준의 급여를 모든 주민에게 적용 하는 보편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복지국가의 발전과정에서 현금과 현물 사이의 균형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아래 그림에 보인 바와 같이 우리사회 복지국가의 사회지출 유형은 전체 주요 복지국가의 현

금과 현물의 상대분포에서 고찰했을 때 2015년 현재 양쪽 모두에서 부족한 전형적인 저부담-저복지 유형에 해당한다. 이 그림의 준거가 되는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변화가 있었지만 우리 사회가 여전히 저부담-저복지에 머물러 있으며 향후 중부담-중복지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에는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전세계적으로 복지국가 긴축의 국면에서 현금급여 위주의 접근이 해당 사회 주민이 직면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에 있어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과 민간에 맡기려는 경향과 결합되는 경우 복지국가에 대한 시장주의적 접근이 강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우리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확인해왔다.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주요 공약으로 한 국 복지국가 담론의 한 복판에 들어선 기본소득과 같이 무조건적으로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현금 급여의 경우 개인 자유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배제할 이유는 없다. 다만 기존 현물급여 성격의 사회서비스의 확대와 병행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운영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대통령 선 거과정에서 소구력 높은 정책 공약으로써 현금복지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온 한국 복지국가 형성 의 특성상 현금-현물 균형적인 복지국가 모형에 대한 사회적 동의와 의식적 노력이 없는 경우 현금복지가 확대되는 경향성은 지속될 개연성이 크다.

GDP 대비 현금과 현물의 사회 지출 비율, 2015년 기준(%)²⁵¹



* 현물복지와 현금복지의 균형 분포도(출처: 이태수, 김진석 등(2022). 성공한 나라, 불안한 시민.)

우리 사회의 경제규모를 고려했을 때 2015년 GDP 10% 수준에서 최소한 OECD 평균 수준에 이르기까지 대략 10%, 좀 더 나아가 복지국가의 전형으로 여겨지는 북유럽 4개국이나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1인당 GDP를 보이는 이탈리아 스페인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면 최대 15-20%의 추가부담이 가능하다. 중부담-중복지의 경로로 간다는 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현재 상태에서 우리의 지향점까지 닿는 데에는 다양한 경로가 가능하다. 우선 사회지출 추가 부담의 여력을 완전기본소득full basic income:FB 과 같은 방식의 현금 급여에 지출하는 경우(아래 그림 한국A)로 이 경우 대략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를 포함하는 남부유럽 모형에 가까워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 반면 2015년 현재 상태에서 현금복지에 8.3%, 현물복지에 7.8% 정도의 균형 적인 지출을 하는 경우 총 16.1%의 추가 부담을 통해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를 포함하는 북구 복지국가의 모형에 이르게 된다. 결국 비슷한 수준의 사회적 투자를 통해 현재의 저부담-저복지 복지국가에서 중부담-중복지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합의수준과 의식적 노력에 따라 최종적인 종착지의 모형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이다.

넷째, 가족 중심의 국가-가족 복지국가에서 개인 중심의 국가-개인 복지국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국가-개인 복지국가는 주민의 제도적 시민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가족이라는 사회적 제도에 대한 편입 여부와 최대한 독립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자유로운 개인의 해방이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개인의 완성에 있으며, 이를 위해 어떠한 개인도 가족이나 친구 등에 의존하지 않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강조한다. 한 사회의 생산과 재생산을 위한 가족의 기능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복지국가의 수립과 운영이 반드시 가족 기반으로 운영 되어야 할 필연성은 희박하다. 특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구구조와 가족구조의 급속한 변화, 그 과정에서 1인가구의 지속적인 증가 경향을 고려할 때 국가-개인 복지국가는 그 개연성이 더욱 강화되며 국가-개인 복지국가의 구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국가-가족 복지국가는 가족의 재생산 기능을 전제하고 그 기능이 부족하거나 일시적으로 정지된 경우에 한해 복지국가가 개입하는 사실상 선별적인 접근의 근거를 제공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부양의무자 기준과 같은 문제적 제도가 그동안 정당성을 인정받아온 데에는 이와 같은 접근과 관점이 배경이 되었다 할 수 있다. 또한 국가-가족 복지국가는 사회권적 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자격으로서 가족의 구성을 강제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전통적 성역할

모형과 이에 따른 성불평등을 확대 재생산할 우려가 있다. 국가-개인 복지국가는 이런 점에서 젠더적 맥락에서도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원칙적으로 모든 개인이 자신 이외의 어떠한 개인이나 사회적 관계로부터 독립적이라는 것은 결국 노인, 장애인 등 일상적인 돌봄과 생활상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라도 예를 들어 가족에 의존하지 않고도 존엄한 자율적 삶을 누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타인에 의존하지 않고도 인간다운 존엄함 삶을 모두가 누리기 위해서는 타인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의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환경의 구축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의 형성이 가능해진다.

여기서 말하는 개인화는 사회적 포용이나 연대와 배치되는 개념이 아니며 오히려 모든 개인의 사회적 포용과 연대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백과 백-거네스 하임은 고도의 분화를 특징으로 하는 현대사회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근본적 불완전성으로 인해 개인화가 현대사회의 구조적 특성임을 강조한다. 이런 점에서 경제, 정치, 복지, 고용, 교육 등 사회정책 영역에서 가족과 같은 특정 공동체가 아닌 개인을 중심으로 제도와 정책이 수립되고 운용되는 것을 현대사회의 특징으로 보았다.

또한 복지국가의 구현 과정에서 국가-개인 복지국가는 가족을 경유하지 않고 국가와 개인 간의 직접적인 거래(transaction)를 통해 개별 시민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는 국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주민의 체감도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 이와 같은 직접성과 높은 정책 체감도는 결과적으로 복지정치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다섯째, 생태와 조화를 이루는 복지로서 녹색 복지국가(green welfare state, 생태복지국가eco-welfare state)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복지국가의 발달과정을 살펴보면 복지국가는 전통적으로 완전고용을 주요한 전제이자 정책적 조건으로 발전해왔다. 이와 같은 완전고용의 전제는 경제적 측면에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때만 가능한 사회적 조건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복지제도와 복지국가는 내재적으로 충돌하는 경향이 있다. 즉, 복지 국가 운영의 전제가 되는 경제성장은 다른 한 편으로는 탄소배출의 증가를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한편 복지국가가 본질적으로 당면한 사회적 문제와 위기에 대한 조직적이고 제도적인 대응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현재의 기후위기는 사회정책과 복지국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경제성장 그 자체보다 복지와 노동, 그리고 환경을 동시에 우선시하는 접근을 통해 사회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것은 사실상 역사적으로 가보지 않은 복지국가의 길이다.

결과적으로 인간의 웰빙과 생태적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접근하는 녹색 가치와 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가치체계로서 사회민주주의의 융합적 사고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전환'의 위협에 대한 사회적 대응에 있어서 소득재분배와 사회서비스 제공이라는 복지국가의 전통적인 기능은 필수적이지만, 이것을 반드시 중앙집권적으로 운영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자율과 연대, 상호 보완성의 가치를 중시하는 생태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할 때 국가와 정부에 의한 중앙집권적 접근보다는 공동체적 접근과 지역분권적 접근을 지향한다. 또한 발전지향성은 필연적으로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노동시간 감소와 같은 방식으로 탄소배출 절감 등 녹색국가의 면모뿐만 아니라 남은 시간을 활용하여 돌봄이나 가사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개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여가문화 활동을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나가며: 새로운 복지국가 건설을 위하여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전지구적으로 혹은 지역적으로 우리 사회 고유하게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위기와 대전환의 성격에 대해 고찰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대전환의 시대에 적절한 새로운 복지국가의 요소들에 대해 기술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책환경의 거대한 전환, 이에 대응 하는 복지국가 전환의 과제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새로운 복지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주객 관적 조건과 환경을 구축해야 하는 과제가 추가적으로 강조되어야 한다.

우선, 이와 같은 전환 과정에 필요한 복지재원의 확보이다.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제안될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누진적 보편증세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즉, 주민 모두가 복지재원 확보를 위한 증세에 참여함으로써 복지정치의 주권자가 되도록 유인할 뿐만 아니라 담세 능력이 더 많은 주민들은 더 많이 부담하게 하는 누진적 보편증세가 필요하다.

둘째, 복지정치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복지국가의 항상적 우군이 될 수 있는 조직노동이나 중산층의 연대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또한 1997년 이후 번갈아 집권해온 자유주의정당과 보수주의정당은 공통적으로 복지국가의 확장을 위한 강력한 의지나 철학을 가진 정당정치세력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그나마 일관되게 보편주의 복지국가로의 체제 전환을 추구하는 진보정당은 아직 수권 정당의 면모를 갖추었다고 보기 힘든 상황이다. 독일과 스웨덴 등 주요 복지국가들의 사례를 고려했을 때 복지국가의 수립을 함께 할 강력한 권력자원의

존재 없이 복지 국가의 수립과 강화는 거의 불가능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집권을 전제하는 강력한 친복지 정당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다른 한편 노동, 시민사회 영역에서 복지국가 수립을 위한 강력한 권력 자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 사회 복지국가는 전체적인 차원에서 복지국가의 확대와 동시에 지역의 분권 역량 강화라는 이중적 과제를 안고 있다. 앞서 녹색복지국가의 효과적인 구현을 위해 지역, 공동체 중심의 분권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지역과 지자체의 역량 강화는 필수적이며, 이들 지역과 지자체가 역량을 개발하고 발휘하기 위한 물질적 토대를 구축하고 확장하는 데 중앙정부와 국가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이 필요하다.

패널
발표

진보정치의 비전,
정책의 전환

장석준

패널 발표 진보정치의 비전, 정책의 전환

장석준 정의정책연구소 부소장

1.

한국 사회에서 ‘진보정치’란 무엇인가? : ‘진보정치’란 좌파정치의 한국적 표현이지만, 단순한 번역어라고만 할 수는 없는, 독특한 역사적·구조적 의미를 함축하기도 한다. 이는 제6공화국과 맺는 긴장 관계를 통해 가장 선명히 정리될 수 있다. 제6공화국 헌법은 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의 전신들에 의해 제정됐으며, 노동자대투쟁 등을 통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민중 집단들의 참여는 배제됐다. 한국의 진보정치는 이런 민중 집단들을 결집해 제6공화국 질서에 도전하는 정치로 출발했다.

2.

한국 진보정당운동이 마주한 도전 : 자본주의 사회에서 태동하고 활동하면서 그 자본주의 사회를 변혁하고자 하는 좌파정당은 늘 고유한 긴장, 모순과 마주한다. 기존 민주주의 틀 안에서 출발하면서도 이 틀에 도전하거나 이를 전복 혹은 극복해야 한다는 상황이 그것이다. 한국의 진보정당들에게 이는 제6공화국 정치 무대에 진출해 그 안에 거점을 확보해야 하지만 이것 자체가 기존 정치 체제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발생하지 않으면(가령 일정한 제도 변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현실로 나타난다. 실제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부분 도입이라는 미미한 개혁이나 없었다면, 민주노동당이 민중당과 확연히 구별되는 성과를 이룰 수는 없었을 것이다.

3.

진보정당운동 제1기 :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 전농 등의 결합으로 민중당과 구별되는 자생력을 확보하는 한편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부분 도입에 힘입어 2004년에 원내에 진출할 수 있었다. 민주노동당의 전략적 목표는 ‘국민의힘 대 더불어민주당’식 양당 구도를 진보정당이 포함된 삼당 구도로 바꾸고 그럼으로써 제6공화국 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었다. 이는 민주노총 등을 중심으로 한 핵심 지지 집단에 더해, 제6공화국 수립 이후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온 광범한 집단의 상당 부분을 인입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고 가정됐다. 2002년 지방

선거, 2004년 총선을 거치며 대두한 범민주당-진보정당 교차 지지층은 이러한 과정의 한 중간 단계로 인식됐다. 그러나 2007년 대선이라는 유일무이한 기회를 놓치고 이명박 정부 초기의 진보정당운동 혼란기(하지만 창조적 혼돈을 동반했던)에 접어들었으므로 이 패러다임의 역사적 시효는 소멸했다. 다만 민주노동당 대통령후보 경선에서 '제7공화국 수립'을 내걸었던 노회찬 의원은 이 역사적 상황의 의미에 대해 날카롭게 이해했다고 볼 수 있다.

3.

진보정당운동 제2기 : 통합진보당 창당과 함께 진보정당운동 제2기의 주류 노선이 확정됐다. 제1기와 달리 범민주당은 더 이상 진보정당의 경쟁-극복 대상이 아니라 연합 대상으로 상정됐고, 범민주당과 함께 이른바 '민주(진보)대연합'을 구축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맞서며 그 이후를 준비하는 것이 진보정당의 과제가 됐다. 여기에는, 민주대연합 정부가 들어선 뒤에 제6공화국 정치 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수준의 본격적인 정치제도 개혁(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관철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복안이 깔려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촛불항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들어섰지만, 정의당이 바라던 선거제도 개혁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기괴한 결과물로 귀결됐다. 게다가 양대 정당이 비례위성정당을 통해 그나마 선거제도 개혁 효과마저 짓밟음으로써 정의당은 도약은커녕 현재까지 지속되는 위기-쇠퇴 국면에 접어들었다. 한편 10년이 넘는 이 역사적 경험 속에서 과거 민주노동당 지지층의 상당 부분이나 범민주당-진보정당 교차 지지층은 더불어민주당 지지 강도가 더욱 강해진 한국형 '진보'층으로 진화해왔다. 애초에 범민주당 지지에서 진보정당 지지로 이동하리라 전망되고 기대됐던 집단들이 오히려 범민주당 지지를 강화하는 쪽으로 정치 성향을 정리한 것이다. 진보정당운동 제2기 노선의 파산이었다.

4.

정의당의 대선, 지방선거 결과로 나타난 진보정당운동의 현 상황 : 이상의 역사적 검토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정의당 위기와 쇠퇴의 핵심에 한국 진보정치의 고유한 긴장, 모순이 자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정의당은 진보정당운동 제2기의 파산 이후 제6공화국 정치 질서에 대한 기본 입장과 대응 방향을 정하여 구체적 실천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적응인가, 아니면 도전인가? 적응 아니면 도전의 자세를 분명히 취한다 하여 현실정치에서 지금보다 훨씬 나은 성과를 거두리라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적어도 적응과 도전 사이에서 불분명한 입장을 취해온 지난 2년의 결과가 선거에서 정의당에 대한(정치적 유효성을 상실한 정당에

대한) 대중의 철저한 심판으로 나타났다는 점은 분명하다.

5.

도전을 선택할 경우 : 제6공화국 정치 질서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 도전하는 것으로 기본 입장과 대응 방향을 정할 경우에 정의당은 이 기본 노선, 전략을 4대 위기(경제 위기, 전 지구적 패권 위기, 감염병 위기,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구조 개혁과 교직시켜야 한다. '제7공화국 수립'이라는 '오래된 미래'는 이러한 작업을 전개하기 위한 기본 바탕이 될 수 있다.

6.

도전의 선택이 현실정치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가능성 : 양당 독점 정치가 대단히 안정적인 국면에 이른 듯 보이지만, 다른 한편 절정에 이른 양당 독점 정치에 대한 실망과 환멸 또한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일각이 기대(?)하는 것처럼 무능하기만 하지는 않겠지만(아니,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유능한 테크노크라트형 통치를 펼칠 수도 있다), 4대 위기에 전향적인 대응을 하길 기대하기는 힘들다. 제6공화국 정치의 기본 동학에 따른다면, 그럴수록 반대편인 더불어민주당 지지가 다시 늘어나게 마련이다. 그러나 현재가 제6공화국 정치의 '말기적 상황'이라 진단할 경우, 과거처럼 양당 중 다른 한 쪽의 지지가 확대될 뿐만 아니라 두 당 모두에서 이탈하는 집단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실은 박근혜 정부 시기에 안철수 세력을 중심으로 이러한 제3당 공간이 열린 바 있다. 물론 양당 실망층이 이념이나 계급-계층 면에서 너무나 다양하고 원심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들을 결집해 세력화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과제다. 그러나 정의당 등 진보정당운동이 제6공화국 질서에 대한 도전자라는 면을 인상적으로 부각시킨다면, 적어도 이 중 상당히 의미 있는 일부가 진보정당의 새 지지층으로 인입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7.

'도전'은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가? : 도전을 표현하는 수단이 진보정당운동 제1기나 2기와 같을 수는 없다. 제1기에 범민주당보다 왼쪽에 있는 세력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던 막연한 기대는 이제 단순 반복될 수 없고, 당시에 이 기대에 공감하던 이들 중 대다수(심지어는 민주노총 조합원들까지)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으로서 노쇠해가고 있다. 제2기에 진보정당이 추진하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위성정당의 '합법적' 성공 사례 탓에 한국 사회에서

더는 선거제 ‘개혁’의 수단이 되기 힘들다. 진보정당운동은 일단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대체할 대안적 선거제도(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바람직하다 본다)를 내세워야 하며, 선거제도 개혁만 주창하던 과거의 한계에서 벗어나 제6공화국 정치 질서의 기본 제도 전반(대통령제, 승자 독식 선거제도, 지나친 중앙집권화 등등)을 비판하면서 ‘제7공화국’으로 나가려는 전면 개헌을 제창해야 한다. 여기에서 핵심은 제6공화국에 대응하는 제7공화국의 개별 제도들(내각제 등등)이 아니라 이번에는 기존 국회가 아닌 광범한 시민 참여(헌법 제정 시민회의의 구성)로 새 공화국의 원칙과 기본 방향을 정하고 새 헌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현재의 의견 분포와 세력 관계 속에서 이러한 제한적 과정을 곧바로 실현하기는 힘들다. 2019년 칠레 민중항쟁 정도의 격변이 있어야만 이런 과정이 실제 열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수준의 전망을 내걸고 시민사회 내 여러 세력을 다시 결집할 때에만 양대 정당이 지배하는 정치 현실을 격동시킬 수 있다는 역설의 진실 또한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제7공화국’ 운동의 구심점으로 부상할 때에만 최소한 더불어민주당과 확연히 구별되는 정치적 위상과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단지 새로운 인물을 내걸고 외양을 좀 리모델링하며 활동 방식을 일부 변경한다고 하여 과연 진보정당운동이 침체에서 벗어나 다시 전진할 수 있을까?

8.

탈-제6공화국 민주주의, 탈-자본 민주주의 : 많은 정치학자들이 ‘민주주의’는 이념이 아니라 정체政體일 뿐이라 지적한다. 그러나 보수주의, 자유주의뿐만 아니라 사회주의까지도 20세기의 술한 곡절을 겪으며 매력을 상실한 시대에 결국 대중들 속에 살아남은 ‘이념’이 있다면 그것은 민주주의뿐이다.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다. 한국보다는 사회주의 등의 이념이 여전히 힘을 다 잃지는 않은 대서양 양안 국가들에서조차 상황이 완전히 다르지는 않다. 그렇기에 진보정당운동은 기존 질서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통해 대안의 기본 방향과 핵심 내용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 당 안에서는 사회주의, 생태주의, 페미니즘 등을 토론한다 하더라도 대중들 사이에서는 ‘어떤 민주주의냐는 틀로 이념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한국 진보정당운동이 추구하는 민주주의는 우선 ‘제6공화국의 모순과 한계를 넘어서는’ 민주주의, ‘탈-제6공화국’ 민주주의여야 한다. 이는 제왕적(더 정확히는 ‘보나파르트주의적’) 대통령제, 양당 독점 정치, 승자독식 선거제도 등을 넘어서는 민주주의를 뜻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대중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각급 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민주주의를 뜻한다. 진보정당운동은 이러한 민주주의가 경제 영역으로까지 확장되어야 한다고 주창해야 하며(‘경제 민주화’의 급진적 버전), 이는 현존 자본주의 질서와 충돌하고 대립한다는 점에서 ‘탈-자본(주의) 지향’ 민주주의(‘사회민주주의’의 보다 일반화된 표현이라 이해할 수도 있다)라고 불릴 수 있다. 21세기 한국

에서 진보정당운동이 건설하려 하는 사회국가는 처음부터 ‘탈-자본’ 민주주의 원칙을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 20세기 복지국가와 구별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해가는 과정에서 진보정당운동은 참여와 자율, 자치와 연대의 기관이 되어야 할 노동조합, 협동조합, 다양한 대중조직들과 보조를 맞추며 공동 발전해야 한다. 진보정당(들)과 이런 대중적 사회운동들의 블록(동맹)이 탈-제6공화국 민주주의, 탈-자본 민주주의를 실현해가는 것이 우리 시대 진보정당운동의 핵심 전략이 되어야 한다.

9.

새로운 진보정당 조직 형태 : 진보정당이 주창하는 급진적 민주주의는 당 조직 안에서부터 실험되어야 한다. 20여 년 전 민주노동당은 한국 사회에서 본격 대중정당 모델을 최초로 구현함으로써 정당 조직 발전을 선도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의 전신들이 이 모델의 요소들을 흡수하고 미국식 예비경선제 요소까지 결합하여 현재 한국 정치의 대중정당 형태를 완성했다. 대중정당 모델을 포획하여 두 당의 정치 독점을 강화하는 장치로 만든 것이다. 이 점에서 진보정당들은 오히려 양대 정당에 비해 정당 조직 측면에서 뒤쳐져 있는 셈이다. 진보정당운동은 이제 중앙집권적 대중정당을 넘어 현대 민주주의의 이상과 조건에 맞는 새 모델을 실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현재 유력하게 논의, 추진되고 있는 대안이 지역정당이다. 진보정당운동은 이 논의를 보다 일반화하여, 중앙집권적 위계 조직과는 다른 형태로 전국 활동과 지역 활동을 구축하고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각 지역(광역, 기초)에서는 지역적 주체들이 최대한 자율성을 갖고 지역정당을 만들어 활동하고, 전국적으로는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 같은 기존 전국정당에 지역정당들까지 결합한 정당연합을 건설해 하나의 전국적 정치 세력을 형성하지는 것이다. 정당연합-지역정당 모델은 기존 사고방식에 따르면 하나의 정당이라기보다는 블록(동맹)에 더 가깝겠지만, 현대적 상황에서는 이것 자체가 하나의 복합적-역동적 정당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과거의 중앙집권적 대중정당에 비해서는 불안정해 보일 수 있겠지만, 현실 변화에 맞춰 보다 기민하게 전국적 지도력을 아래로부터 끊임없이 (재)구축하는, 보다 유연하고 유기적이며 ‘운동’에 가까운 조직 형태로 볼 수도 있다. 물론 이런 조직 형태가 완전히 자리 잡으려면 경직된 규제 위주의 현행 정당법을 개폐해야 한다. 그러나 그 전이라도 기존 진보정당들의 전향적 방침에 따라 여러 과도적 단계를 실험할 수 있다. 전망해보자면, 한국에서 진보정당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과 동일한 조직 형태를 취한 채로 이들과 경쟁하여 대등한 수준에 도달함으로써 양당 구도를 깨기보다는, 두 당과는 전혀 다른 조직 형태를 실험하여 기존 정당 정치를 격동시킴으로써 양당 구도를 뒤흔들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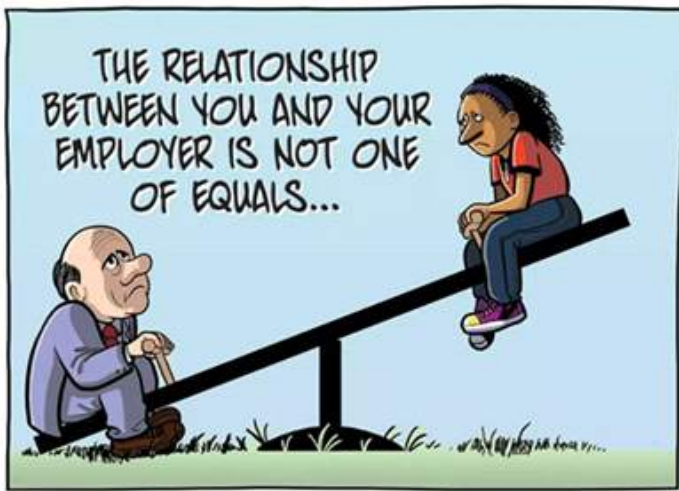
패널
발표

불평등과 노동체제,
노동의 대안

이정희

불평등과 노동체제, 노동의 대안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개별적 종속성 vs. 집단적 대등성

- 집단적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칙 - 실현원리, 대표(representation)
 - “노동조건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되, 그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2018년 발의된 헌법 개정안 제33조4항)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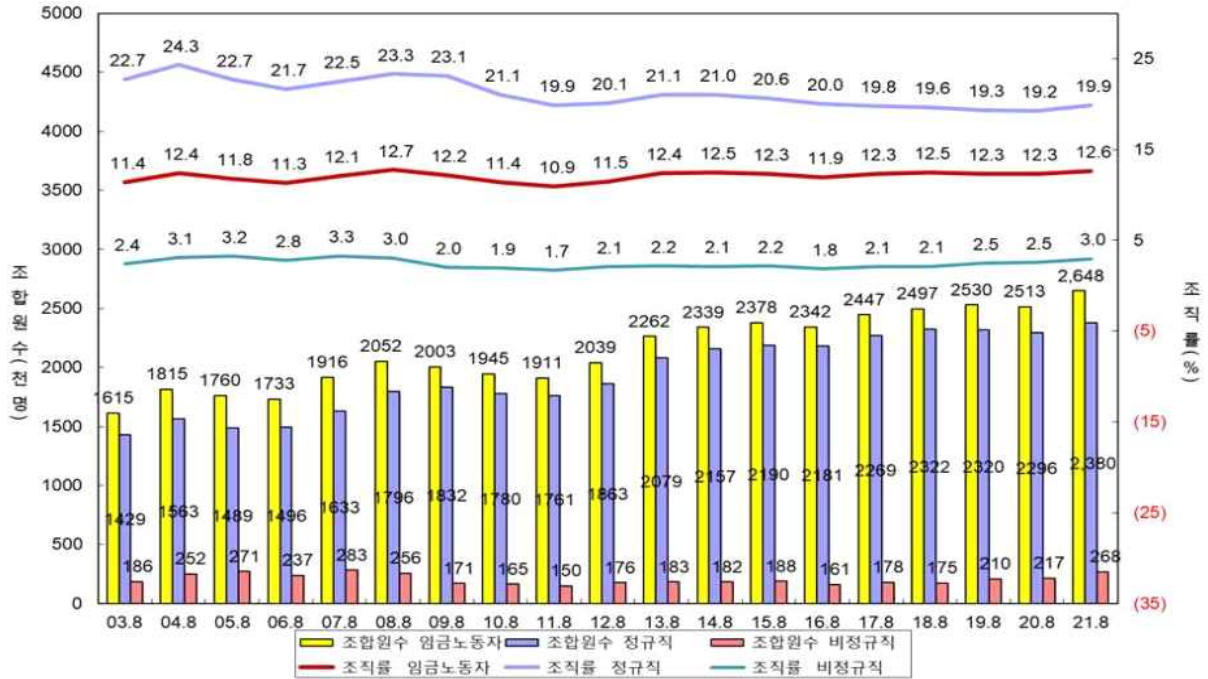
- 한국 노동시장 분절구조(정이환, 2018)
 - 기업규모 · 고용형태 · 성별 분절 복합적으로 작용, 이 중 기업규모별 분절 개선방안 주목
 - 임금 평준화 조정기제 부재, 기업 내부노동시장 체제 지양 → 사회적 노동시장 체제 구축
- 조직률 ↑ 단체교섭 조정도 ↑ ⇒ 소득불평등 ↓ 저임금층 임금수준 ↑
 - “중양집중적 · 조정된 단체교섭 체제는 노동시장이 다수 이익 위해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다.” (OECD, 2017)
- 그렇다면, 한국은?: 1987-2016 실증분석 결과(이병희, 2017)
 - 노조가 임금 불평등 야기하는 요인이라 말할 수 없음
 - 그러나, 임금 평준화 효과 크지 않고, 기업 간 임금 격차 확대 억제하지 못함
- 노사관계 특징
 - 단결권 행사의 양극화: 조직률 증가 but 14%대. 고용형태별, 기업규모별, 부문별 격차 해소 필요
 - 단체교섭 당사자격 논란: 취업형태 다변화, 사용자의 중층성 → 사용자의 연대책임 원리 필요
 - 법상 ‘근로자성’(근로계약관계) 기반의 사업 · 사업장 단위 노사관계 전환 필요

87세대의 퇴장, 그리고..



노조 조직률 격차 (고용노동부, 2021; 김유선, 2021)

- 부문별: 공무원 88.5%, 공공부문 69.3%, 민간 11.3%
- 규모별: 300인 이상 51.5%, 100-299인 10.7%, 30-99인 2.9%, 30인 미만 0.2%



대표성과 발언 채널의 다양화

- 대표성 보장 2가지 원리: 자유주의(가입 원리) vs. 공화주의(대표 원리)
 - 현행 노조법상 대표 범위: “노동조합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1항)
 - 복수노조 교섭대표: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조직한 노조(같은 법 제29조의2)
- 말하기(voice), 민주주의 핵심 요소 중 하나
 -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선거 때 모든 유권자가 동등한 비중을 갖는 표 행사
 - 일터에서 말하기: 이탈(exit), 말하기/항의(voice), 충성(loyalty) (Hirschman, 1970)
 - 말하기 공간: 조직 내(체계적 구조와 수직적 위계) vs. 조직 밖(느슨하고 수평적인 관계망)
 - 발언 채널 기능: 조직 성과 증대 의견 제시, 불만·부당처우 공론화, 정보 획득
- ‘온라인’ 발언 채널: 디지털 보이스(digital voice)
 - 블라인드(Blind), 직장갑질119, 카카오톡 오픈채팅, 네이버밴드, 다음카페...
 - 블라인드 가입자 수 : 약 400만 명(2021년 말 기준)
 - * 300인이상 기업 근로자수 4973만명: 소속 근로자 4109천명, 소속외 근로자 864천명 (고용노동부, 2021, 고용형태공시자료)

[논평] 스타벅스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이 필요하다!

by 대변인실 posted Oct 05, 2021 Views 1452

[논평] 스타벅스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이 필요하다!

[스타벅스 노동자들의 트럭 시위 예고를 환영하며...]

스타벅스 매장에서 근무하는 일부 노동자들이 업무부담이 과중하다며 트럭 시위를 예고하여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동조합이 없는 한국의 스타벅스 노동자들이 단체행동에 나서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시위는 스타벅스 노동자들의 요구 사항을 담은 현수막을 붙인 트럭에 영상을 상영하며 운행하는 방식으로 '블라인드' 업에서 논의 중이다.

스타벅스 노동자들의 트럭 시위 예고는 지난달 28일 실시된 스타벅스 다회용 컵 무료 제공 이벤트인 '리유저블 컵 데이'에서 촉발되었다. 이 이벤트로 스타벅스 사이렌오더 애플리케이션에는 7천여 명의 동시 접속자가 몰리면서 시스템이 마비 되고, 일부 지점에서는 1시간 이상의 대기 물은 기본이고, 대기 종료만 650잔이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스타벅스 노동자들은 처우 개선과 과도한 마케팅(이벤트 굿즈 행사) 지양, 임금 구조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스타벅스 노동자들의 트럭 시위 예고를 환영한다. 또한, 트럭 시위에 이어 노동조합을 결성할 것을 권한다. 노동조합을 결성해야 스타벅스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타벅스 노동자들이 겪는 문제는 결국 스타벅스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이벤트나 정적이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거나 근무강도를 지나치게 높이는 것이다. 노동조합을 결성하면 단체 교섭을 통해 스타벅스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노사가 함께 결정할 수 있다. 즉, 스타벅스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현장을 잘 아는 노동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것이다. 노동조합 결성하면 단체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단체 협약을 체결하여 요구 사항을 실현할 수 있다. 스타벅스 사용자는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고, 이를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되므로 처벌할 수 있다.

스타벅스 노동자들의 트럭 시위는 교섭을 할 수 없지만, 노동조합은 조직적으로 교섭할 수 있다. 또한, 트럭 시위했다고 하고나 징계를 당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것으로부터 노동자 자신을 지킬 수 있다.

스타벅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면 민주노총은 언제든지 달려가서 지원하겠다. 민주노총은 스타벅스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열심히 연대하고, 투쟁할 것을 약속한다. 또한, 10월 20일 종파업을 통해 청년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쟁취하는데 힘을 다 하겠다.

2021년 10월 5일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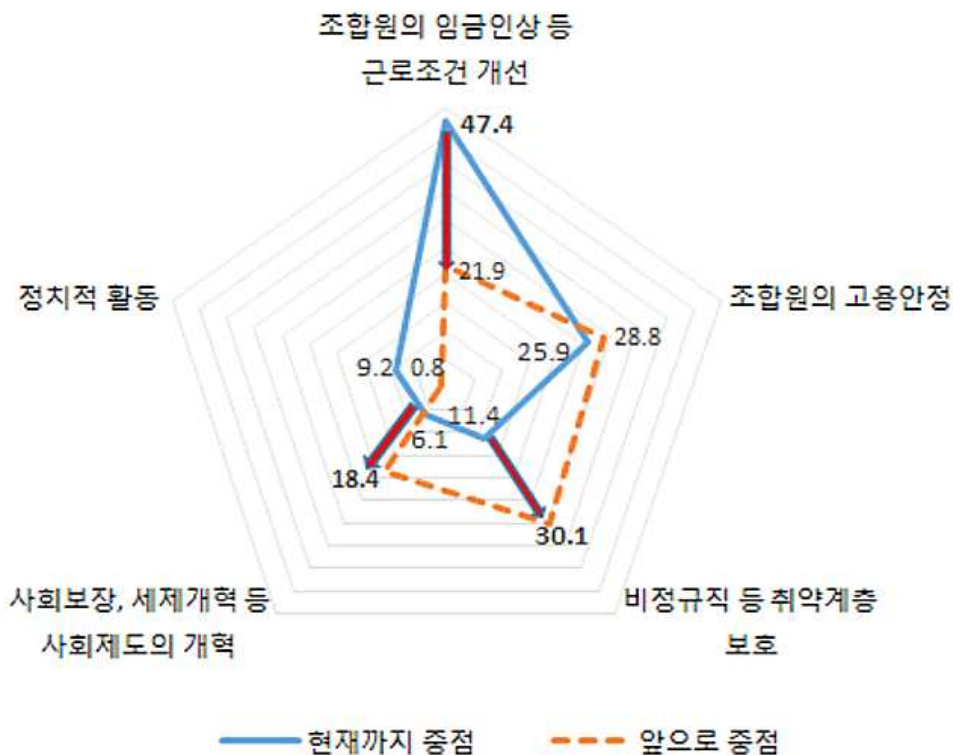
B. 민주노총이 금일 발표한 논평에 대한 답변
금일 민주노총에서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트럭시위 이후에도 스타벅스파트너들이 민주노총과 손을 잡아 노조를 창설해야한다는 글이었습니다.

이에 트럭시위의 대표로서 공식적으로 답변드립니다.
민주노총은 트럭시위와 교섭을 시도하지 마십시오.
트럭시위는 당신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트럭시위는 노조가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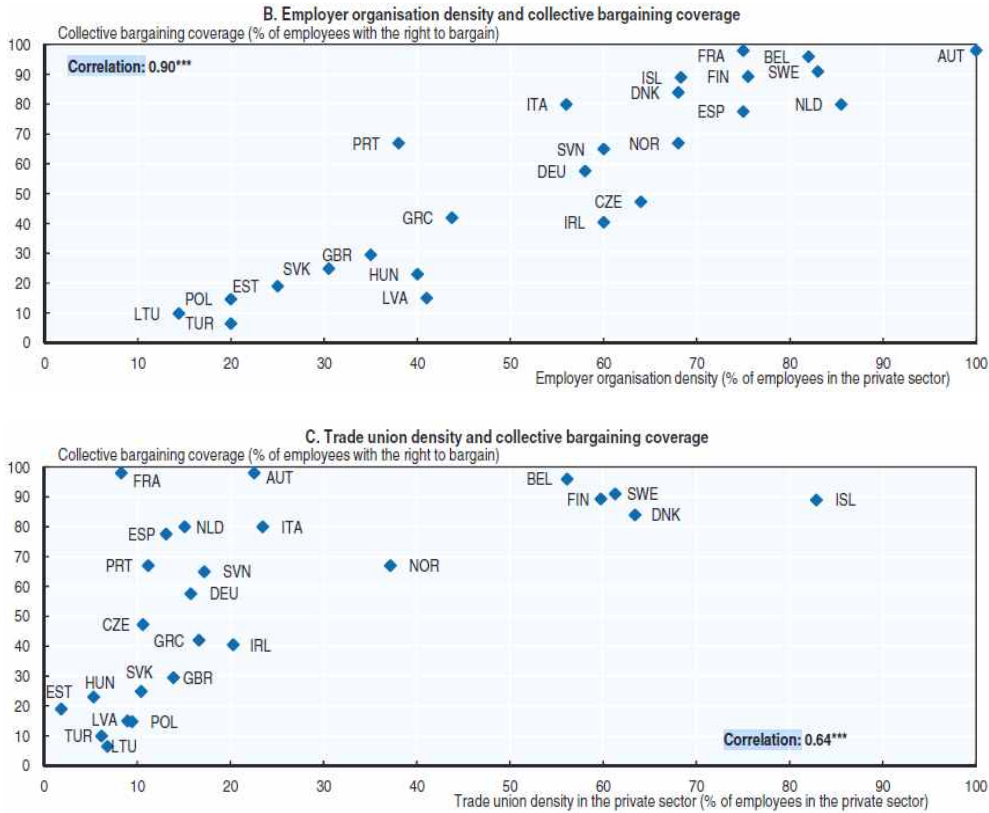
우리 스타벅스코리아는 노조 없이도 22년간 식음료 업계를 이끌며 파트너들에게 애사심과 자긍심을 심어준 기업입니다.

트럭시위를 당신들의 이익추구를 위해 이용하지 마십시오. 변질시키지 마십시오.

“노동조합, 사회와 만나야 한다” (장흥근 외, 2017)



단체협약 적용률과 조직률



사용자 단체

○ '노동관계 당사자'로서 사용자단체 호명하기

- 최저임금위원회: 경총(KEF), 중소기업중앙회(KBIZ),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 택배·배달 등 사회협약 당사자: 택배사업자, 대리점연합회, 화주단체 등
- 탄소중립위원회: 철강협회,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자동차산업협회, 건설기계산업협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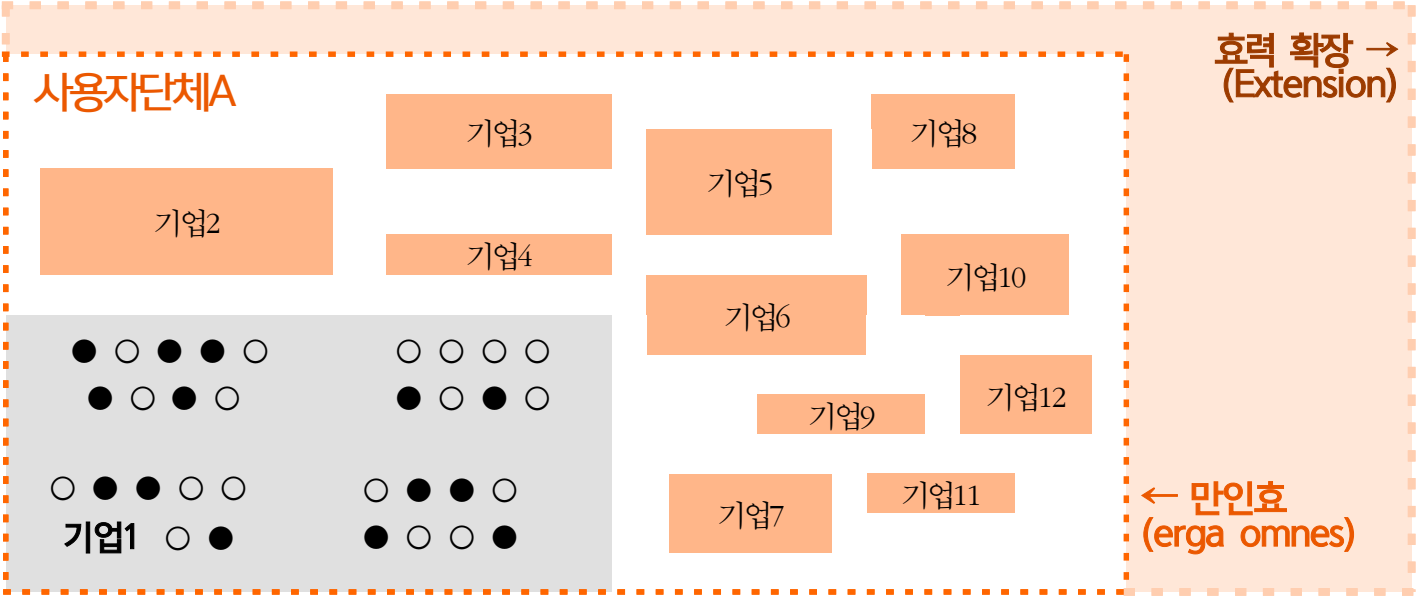
○ 노동관계 당사자로서 '권한' 행사의 근거는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책임'

- 노동관계 당사자로서 행위: 단체교섭 및 협약의 체결, 노동정책 다루는 정부위원회 참여 및 권한 행사, 노동정책에 관한 의견 공표, 노사관계 개입 또는 입장 표명 등

○ 직업 세계의 '법규범'으로서 단체협약, '입법자'로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

- 1936년 프랑스 단체협약법 '업종별 단체교섭위원회' 제도 창설(박제성, 2020)
- 2018년 영국 노동법개정선언 '업종별 노사공동위' 제도 창설 제안(이정희, 2020)
- 노동부장관 소집 → 해당 업종 대표 노동조합·사용자단체 대표 교섭 → 업종별 협약 체결
 - 이때 정부는 원활한 교섭과 협약의 체결 지원 및 행정명령 통해 체결된 단체협약에 해당 업종 모든 사용자와 노동자에 대한 규범적 효력 부여

단체협약 만인효와 효력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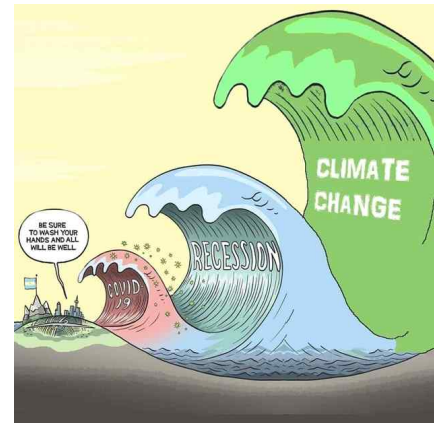
비고 : ● 조합원, ○ 비조합원

- “공적 권위에 의한 단체협약 효력 확장은 불안정 노동계층의 노동조건과 고용상황을 보호하는 핵심 정책수단이다. 단체교섭 안정화시키고 갈등 수준도 낮추기 때문에 사용자단체에도 도움이 된다.” (Hayter & Visser, 2021, Making collective bargaining more inclusive: the role of extension)

기후위기: 노동-자연 관계성

○ ‘노동’과 ‘자연’은 통합될 수 없는가?

- 화석연료 활용의 증가와 노동운동의 성장(Mitchell, 2013):
 - 석탄 채굴(광산) · 운반(철도) · 생산설비 집중 지역(공단)
 - 노동자 대중 결집
 - 전투적 노조운동 · 대중 민주주의 성장
- “환경운동은 자연에 어떤 피해를 끼치든 상관없이 일자리를 지키려 한다고 노조를 비난했고, 노조는 환경주의자들이 노동자들의 일자리의 필요성, 실제로는 생존의 필요성을 자연의 뒷전에 놓는다고 비난했다.” (Rathzel & Uzzel, 2013)
- “노동자들은 환경을 보호하지 않으면 내일 죽지만, 일자리를 잃으면 오늘 죽는다.”(Mazzocchi)
- 적록동맹의 가능성: 생태를 말하는 노동운동 + 고용을 말하는 기후운동
- 노동진영에서 자연(환경 · 생태)의 자리
 - 일자리와 자연재해(폭염, 폭우, 한파 등)가 노동조건에 미치는 영향에 치중해 왔음
 - 기후변화 대응 차원의 규제가 탄소집약산업 노동자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대응으로 확산 중



지금 우리는?

발전산업 노조
“고용대책 없는
NDC 상향 규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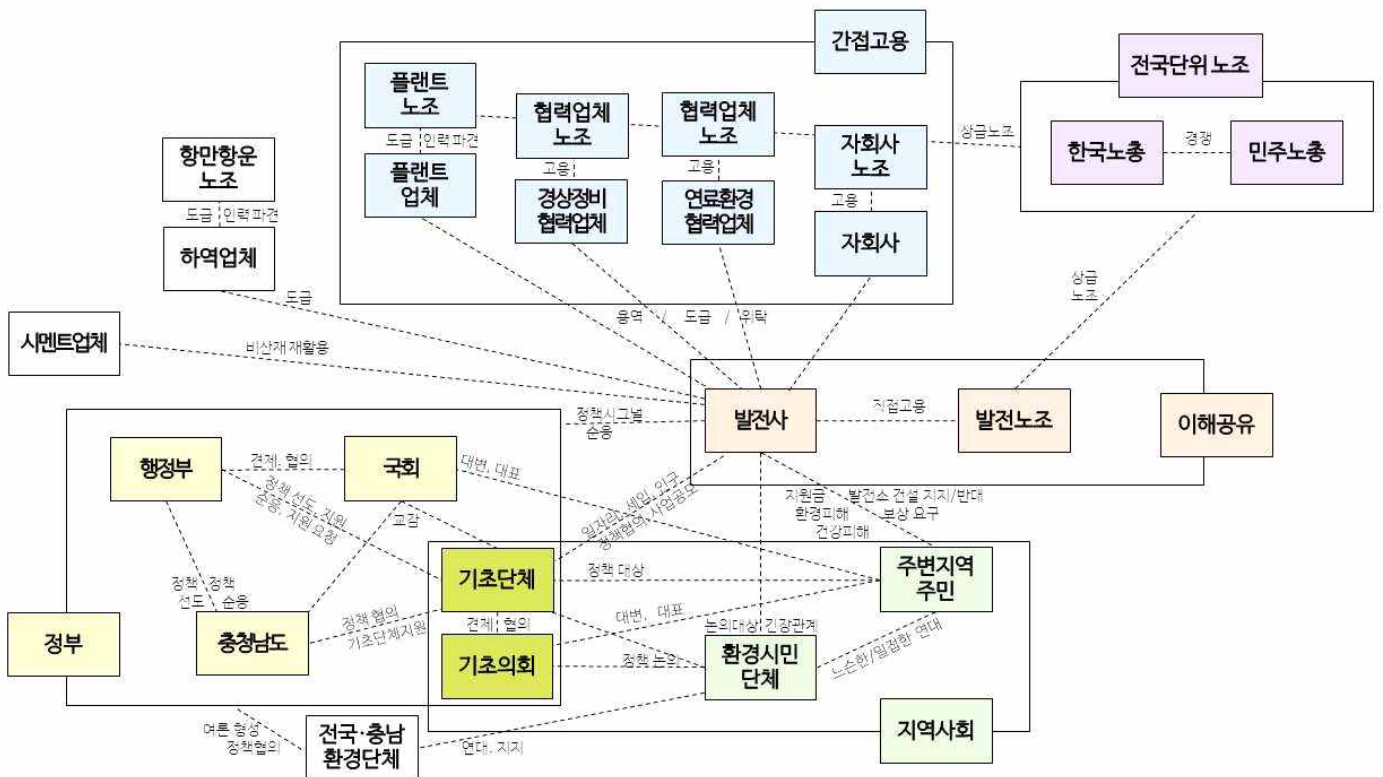
금속산업 노사
산업전환 합의,
그러나
효력 범위?




謹 弔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2021.09.30
 사측을 향해 겨뉘져야 할 투쟁의 칼날이
 전주위원회 동지들에게 겨뉘졌습니다
 본인들의 기록권을 지키기 위해
 지역위원회 지도자 동지를
 집단으로 린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울산4공장과 전주공장 간
생산물량 이전 문제 두고
노노 갈등.
‘물량 물신주의’
친환경차로의 전환 시에
어떤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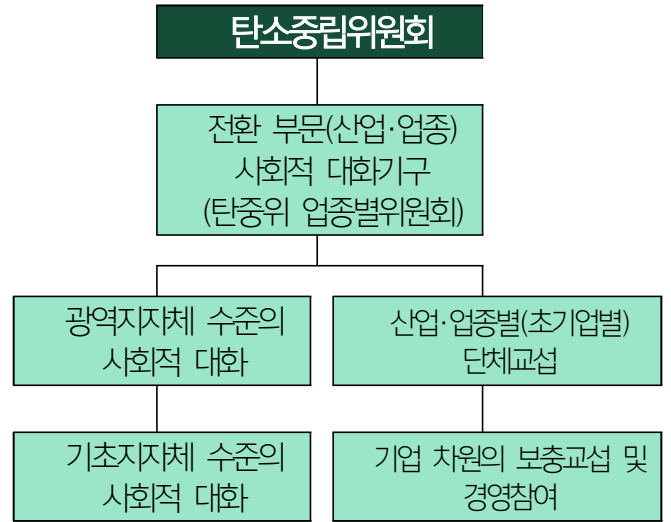
이해관계자 지도 - 충남 탈석탄 현황 (에너지기후연구소, 2020)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 중층적 거버넌스 구축

- 의제의 포괄성(산업정책, 노동정책, 사회정책, 지역정책)과 관할 범위의 중층성(전국, 지역, 산업·업종, 기업) 반영
- 유기적인 이원화 전략:
사회적 대화와 단체교섭 병행
일터 민주주의 강화
- 참여 주체의 확대:
노동계·사용자단체만이 아니라 환경단체, 시민사회단체,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등과의 협의



자료: 박태주·이정희(2022)

○ 우선 과제

- 탄소중립위원회 개편: 대표성 제고, 운영 능력 제고 등
-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 진행 중인) 발전산업 대상 거버넌스 구축·운영 및 모범사례 (best practice) 타 산업·업종으로 확산

시야의 비극을 넘어 연대의 재구성

○ 3대 비극

- 공유지의 비극: 인류 공동의 자산인 지구 생태 보호 vs. 선진국-개도국
- 시야의 비극: 세대 간, 원-하청 간, 자본-노동 간
- 악순환의 비극: 대량생산-대량소비-대량폐기, ‘성장’ 정책의 지속가능성?
- “일부의 빈곤은 전체의 번영을 위태롭게 한다.”(ILO, 1944, 필라델피아 선언)

○ 전환기, 노조 대표성의 딜레마

- 80-90년대, 미국과 유럽의 노조 양보교섭: 임금·고용보장 vs. 기업 경쟁력·비정규직 증가
- 조합원(members) vs. 노동자(workers in general), 일자리 보장 vs. 기후정의

○ 수동적 적응 vs. 적극적 대응

- 노동력의 ‘값’에 관한 교섭 vs. 노동의 ‘목적’에 관한 논의
- “언제, 누가, 어디서” vs. “무엇을, 어떻게, 왜”: 사회적으로 유용한 생산
- 생태·지역공동체와의 연대·협력 강화
- 노동조합의 녹색화 vs. 녹색 노동조합주의(Barry, 2013)

“여기는 내 회사잖아.”
 “이게(폐놀 유출 사진) 다 우리 얘기다”

“이놈의 회사, 뭐가 좋다고 이렇게 개고생을 해?”
 “저는 우리 회사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무언가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하는 일이 결국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면, 나는 뭘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지? 돈을 벌기 위해서?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저는...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이곳에서의 일이 좀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일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음 좋겠고.”



노동 뉴딜을 위하여

○ “지금껏 존재한 적 없는”

- 루즈벨트 ‘노동 뉴딜’ : 전국산업부흥법, 전국노동관계법, 공정근로기준법, 사회보장법 제정
- 사용자들의 인사·경영권 일방 행사의 ‘야만의 시대’에서 ‘일터 문화화’ 시작(윤효원, 2020)

○ 노동시장 제약 조건과 대안 모색

	제약 조건	대안 모색
노동시장	- 기업 규모별, 고용 형태별 격차 - 노동시장 지위와 위계별 차별적 충격	- 산업·업종별 임금·노동조건에 대한 통일적인 규범 마련 및 적용
노동법	- 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반. - 노동권·사회안전망 포괄성 취약	- ‘일하는 시민’으로서 노동권 행사 - 노동권·사회안전망 포괄성 확대
노사관계	- 기업 단위 중심 - 산업·업종 차원의 적극 대응 지체 - 노사 담합 및 조합원 이해 우선 대변	- 산업·업종 수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 양날개 전략: 단체교섭과 사회적 대화 - 노동조합 대표성 확대
민주주의	- 노동3권 행사(말할 권리) 어려움 - 낮은 일터 민주주의 수준	- 노동3권 보장 확장 및 내실화 - 전략적·일상적 경영참여 확대

패널
발표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 전환의 과제

박진희

패널발표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 전환의 과제

박진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사장

새로운 공화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다루어야 할 과제로 전통적인 정치, 경제, 사회적 과제가 여전히 핵심 과제로 등장하겠지만 새로운 핵심 주제로 다루어야 할 것이 기후위기 대응이다. 최근 기후 관련 보고서들은 위기 대응을 위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21년 발간된 IPCC 6차 보고서는 2040년에 이미 지구온도가 산업화 전보다 1.5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이는 당초 예상보다 10년이 빨라진 것이었다. 2022년 5월 세계기상기구는 “2022년부터 2026년 기간 중 연평균 기온이 일시적으로 산업화 이전보다 1.5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50%로 증가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점점 빨라지는 기후위기 시계는 한편으로 짧은 시간 안에 급격하게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미 IPCC 6차 제3실무그룹 보고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2019년 대비 43% 줄여야 한다는 제안을 담았다. 현재 배출량의 절반 가량을 줄인다는 것은 주요 배출원이 되고 있는 산업 활동, 교통과 건물난방 등에서 교통연료를 절반으로 줄이거나 무탄소 원으로 전환함을 의미한다. 석탄 발전을 태양광과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대체하고 절대적인 에너지 소비 감축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우리에게 부여된 과제는 직접적으로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인데 이는 한편으로 우리 사회 산업구조의 변화, 에너지시스템 등 인프라 구조 변화, 물질 흐름 관리와 관계되는 순환경제체제 수립 등 사회의 물적 토대를 새롭게 구성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GDP 빠른 성장 달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정착된 우리 사회의 석탄, 석유와 원자력 기반 중앙집중의 대형발전시스템 체제와 이를 유지시키는 관련 시장 제도와 법규, 정부의 관리 조직, 이에 익숙해진 소비자 행동까지 에너지사회기술시스템의 전환이 있어야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면 에너지사회기술시스템 전환 과제는 어떻게 수행되어야 할 것인가? 먼저 에너지정책의 새로운 방향 수립으로 시작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로부터 시작된 탄소중립을 우선 목표로 내세운 에너지정책 내용이 계승, 발전되어야 한다. 세계 시장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에너지

공급 정책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을 우선 목표로 하는 에너지정책이 정립되어야 한다. 이런 방향이 정립되면 자연스럽게 에너지정책의 내용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구성된다. 이와 같은 통합 정책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정책 담당 조직 개편도 병행되어야 한다. 산업자원부 조직이 아닌 '기후에너지부'로 재조직화될 필요가 있다. 이런 조직을 바탕으로 전 세계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누적배출 책임에 맞추어 NDC 목표를 상향시키고 국내적으로 이들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목표치를 법에 명기할 필요가 있다. 이 목표에 맞추어 에너지믹스 계획, 에너지기본계획, 탄소중립 시나리오 이행을 위한 구체 로드맵 작성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에너지정책은 도시공간계획, 교통계획, 자원순환계획 등 다른 관련 계획의 지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도시공간계획과 교통계획이 에너지 소비를 유발하여 온실가스 배출 증가를 가져오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서의 개별 정책으로 이행되는 관행에서 벗어나 기후위기 대응의 공동의 목표를 중심으로 정책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에너지믹스계획이 에너지전환계획으로서 내용성을 갖기 위해서는 분산형 재생에너지 체제를 지향하고 재생에너지 기술의 특성에 맞게 지자체 주도의 지역 에너지계획 수립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한다. 국가에너지계획과 지역에너지계획이 조율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 에너지계획이 실효성을 지닐 수 있게 하는 에너지분권화 정책도 이행하도록 한다. 재생에너지 기술을 충분히 활용하여 지역에서 소비하는 에너지를 지역에서 생산하게 하는 지역 에너지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에 관련 권한을 이전하고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에너지분권화정책을 이행한다. 지자체가 권한을 갖고 있는 개발지구계획 수립 시 재생에너지발전지구 지정도 지자체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지역 분산형 재생에너지체제가 구축되도록 하는 것이다. 도시지구단위계획과 재생에너지발전지구 지정 결합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풍력, 태양광 등 입지를 둘러싼 갈등을 완화시켜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지역 에너지 자립도 향상은 한편으로 고압 송전망 가설로 인한 사회적 갈등, 지방의 수도권 에너지 식민지화 문제를 해소해줄 수 있다. 지자체 에너지 관련 역량 강화는 또한 다양한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지역 현실에 맞게 수행하도록 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에너지전환 정책의 핵심은 무엇보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즉,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에너지효율화 정책에 있다. 2017년부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오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 정비 등이 미흡하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현재 발전량에서 7%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확대해야만 한다. OECD 국가에서 최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일본의 경우처럼 2030년 36-38%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목표를 상향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장애가 되고 있는 각종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야 한다. 농촌 태양광 확대, 해상 풍력 등을 둘러싼 갈등을 완화해줄 수 있는 계획입지제도의 조속한 도입, 기초지자체들의 저마다의 이격거리 규제 폐지, 재생에너지 사업 계획 과정에의 주민 참여 절차 제도화, 주민 투자 없는 이익공유제 개선, 재생에너지 설비계획과 전력망 계획 일치, 지자체 재생에너지 지원 인력 강화, 재생에너지변동성 대응 시스템 구축, 재생에너지에 맞는 전력 시장 구축, 개인 대 개인 전력 판매 가능 시스템 구축 및 관련 제도 정비 등이 속도감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자체의 확대에 초점을 둔 정책에서 재생에너지 사회기술시스템 구축이라는 통합 시스템적 접근 정책을 체계화하고 이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온 에너지효율화 정책 역시 제도, 정책 실행 인력 확대, 효율화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전기요금 정상화와 더불어 이행되어야 한다.

에너지전환은 한편으로 석탄발전 폐쇄, LNG 발전소 축소 등 기존 화석연료 관련 산업 쇠퇴를 가져와 관련 노동자들의 실업을 야기한다.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 경제의 쇠락을 결과하기도 한다. 이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이 '정의로운 전환' 정책이다. 전환 정책은 이제 다만 에너지를 대체하는 정책이 아니라 이런 산업 구조조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실업, 지역 경제 위축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 정책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폐쇄 발전소 부지에 대체 산업 유치 전략, 노동자 재교육 계획, 지역 보조금 지원 등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안을 마련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재생에너지 발전으로의 전환은 전기요금 상승을 초래할 수 밖에 없고 에너지 빈곤 계층을 양산할 수 있다. 에너지 복지 제도 보완 또한 요청된다.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도 불가피하게 대형 재생에너지 설비가 소비와 무관하게 지역에 위치하게 되면서 환경정의 문제가 또한 유발될 수 있다. 공간 계획, 발전소 주변지역 보상제도 등의 기존 제도 개선 및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갈등 예방에 나서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 전략 수립은 또한 민주주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공동의 목표 결정 과정에 구성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시도했던 것처럼 기후시민의회, 시민회의를 조직하여 탄소중립 시나리오 혹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공동 결정은 에너지전환 실천에 구성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패널
발표

젠더갈등을 넘어,
성평등 사회를 향한 새로운 도약

김원정

패널발표

젠더갈등을 넘어, 성평등 사회를 향한 새로운 도약

김원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평등전략사업센터장

- 길게는 최근 10여년, 짧게는 지난 정부 시기는 우리나라 정치권이 젠더 이슈를 다루는 데 얼마나 미숙하며 심지어 해악적인지 뼈저리게 보여준 시간이었음.
 - ‘젠더갈등’이라는 사회 현상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해법에 대한 고민은 제쳐둔 채, 최근 양대 선거에서는 여야/보수진보 할 것 없어 정치권이 앞장서서 청년 남녀 간의 대립구도를 부치기는 최악의 상황을 연출함.
 -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며 청년 남성의 대변자를 자처한 국민의힘이 ‘갈라치기’ 정책을 한다며 비판하였으나, 청년 남녀의 이해관계를 대립시키고 선거 결과에 대해 근거 없는 공포를 조장하는 모습 역시 그와 별반 다름없었음.

- 또한 이 시기는 점점 더 첨예해지는 젠더 이슈에 대한 정치적 리더십, 정책적 역량의 부재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준 시기이기도 함.
 - 일부 청년 남성들 사이에서 여가부, 페미니즘, 여성에 대한 비난과 혐오가 관찰되기 시작한 건 이미 오래전이지만, 오늘날 이러한 정서가 훨씬 더 보편화되고 성평등과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가 제도화되기까지 ‘일베’, 혐오세력이라는 낙인을 부여하는 것 외에 무엇을 했나.
 - 2010년대 중반 이후 청년 여성들 사이에서 ‘페미니즘’이 다시 저항의 언어로 부상하고 낙태죄 폐지, 불법촬영 등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었을 때도, 이들을 지지하고 당사자에게 정치적 발언권을 제공하는 것 외에 자신들의 과제를 정립해 낸 정당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음. 정부 또한 이들의 요구에 대한 즉자적인 수준의 대응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함.
 - 그 결과 ‘젠더갈등’은 2021년 상반기를 거치며 정치적 대립 구도와 밀착되었고, 실제 성평등 정책의 퇴행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됨.

- ‘젠더갈등’을 오늘날 젠더 관계의 변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 현상으로 진단하고, 이에 대응하는 정치적·정책적 해법을 모색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청년세대에서 젠더화된 사회 변화에 대한 각기 다른 요구가 표출되고, 갈등적 이슈들이 사회적으로 조정되지 못하고 있는 현재 상태를 부인하거나(예. 젠더 문제가 아닌 계급 문제, 세대 문제), 혐오세력 또는 반페미니즘 집단의 준동으로 치부해서는 문제 상황을 회복하기 어려움.
 - 오늘날 ‘젠더갈등’을 남녀 청년 간의 불화가 아니라 남녀 청년과 여전히 근대적 젠더 관계를 전제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 제도(기업조직, 병역제도 등)의 불화, 그리고 이를 해소하는데 기여하지 못한 성평등 정책의 실패로 진단할 때 정치의 역할과 개입지점을 정립할 수 있음.
 - 무엇보다 공정, 페미니즘 등 청년 남녀가 제기하는 다양한 주장 이면에 있는 젠더 관계 변화에 대한 요구와 기대, 불안과 두려움을 읽어내고 분석하려는 시도가 선행되어야 하며, 논란이 되는 이슈들을 재정의하며 조정 능력과 해결 의지를 보여주는 정치가 필요함.
- 성평등 정책, 오래된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법 찾고 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 만들어야
- 최근 여가부 폐지/강화 주장 모두 ‘상징’을 두고 전개될 뿐, 그동안 추진된 성평등 정책의 성과와 한계, 발전 혹은 전환의 방향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는 찾아보기 어려움. 이는 그간 성평등 정책 자체가 상당 부분 상징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던 현실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함.
 - 수치로 표현되는 우리사회 고질적인 성별 격차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지만, 성별 임금 격차 등 주요 영역에서 실제 변화를 가져올 만한 정책 수단이 체계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오히려 핵심 이슈일수록 그 공백이 더 큰 상황임.
 - ‘여성 지원’에서 ‘젠더 관계의 변화, 사회구조의 전환’으로 나아갈 것을 표방했던 성주류화 전략은 일선 행정 현장에서 정책 수혜 대상인 남녀 비중을 헤아리는 기술 이상으로 구조적 전환을 위한 정책 모델을 제시하지 못한 채 ‘양성평등’의 반발 논리를 키우는 데 일조함.
 - 이제는 젠더갈등 현상을 통해 드러난 기존 성평등 정책의 공백을 돌아보고, 청년의 성장과 남녀 간 유대를 방해하는 우리사회 정치·경제·사회구조의 변화에 개입할 수 있는 정책 전략을 수립할 필요. 이 과정에서 성평등 정책의 의제, 추진체계, 거버넌스 전반에 대한 성찰과 혁신도 수반되어야 할 것임.
 - 성평등은 자명하고 본질적인 의미를 갖는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매 시기 논쟁과 설득을

통해 의미를 구성해 나가고, 유효한 전략과 수단들을 확립해야 하는 것은 모든 사회의 과업임. 누구보다 진보정치가 강한 책무성을 갖고 이 과정을 선도하며, 그럴 수 있는 정책 역량을 갖추길 기대함.